

학교폭력 문제 진단을 위한 긴급 토론회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으로 본
학교폭력의 자화상**



▲ 일시 : 2012년 1월 4일(수) 15:30 ~ 17:50

▲ 장소 : 흥사단 3층 강당

▲ 주최 : 행복세상을여는교육연대, 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시의회 김명신 의원실

학교폭력 문제 진단을 위한 긴급 토론회

목 차

토론회 일정 소개	3
▶발제 : 박 종 철 (전교조 학생생활국장)	4
“왜 같은 일이 반복되는가?”	
▶토론 1 : 고 유 경 (참학 상담실 상담국장)	37
“학교폭력, 경쟁교육이 나은 기형아”	
▶토론 2 : 문 재 현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장)	40
“학교폭력 사례분석과 사회적 성찰, 대안을 위한 시도”	
▶토론 3 : 배 경 내 (인권교육센터들 상임활동가)	58
“잔혹교육이 학교폭력 부른다”	
 <참고자료>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관련 신문사설 모음	62

학교폭력 문제 진단을 위한 긴급 토론회

□ 취지

대구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동급 학생에 의한 폭력으로 인해 한 남학생의 자살로 이어진 사건을 보면서 한 동안 묻혀 있던 학교 내의 폭력 문화가 다시 사회적 문제화가 되고 있다. 그 동안 이와 유사한 사건이 터질 때 마다 호들갑스럽게 여러 진단이 나오지만 결과는 학교와 그 인근에 경찰 인력 투입 등 또 다른 통제와 폭력적 방식의 해결 방안만 판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사건의 이면에 어떤 문제가 숨어 있는지 진솔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그 근본적 문제해결도 힘들다.

본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문제가 MB의 경쟁교육 정책의 말로인지, 아니면 각 학교마다 일진회 등 저변에 퍼져 있는 폭력 문화의 문제인지, 그것도 아니면 학생의 인권 등 자존감 상실로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한 진지한 진단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교사와 학부모 등 다양한 공동의 노력을 진행할 수 있으면 한다.

□ 세부내용

- 일시 : 2012. 1. 4(수) 15:30 - 17:50
- 장소 : 흥사단 3층 강당(서울 종로구 동숭동 1-28, ☎ 02-741-2013)
- 주최 : 행복세상을여는교육연대,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시의회 김명신 의원실
- 일정표

일정	1월 4일(수)	
15:10 - 15:30	등록	
15:30 - 15:45	개회	- 사회자 : 한만중 (행복세상을여는교육연대 상임집행위원장) - 참가자 소개(발표자, 내빈 소개) - 여는 말: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 교육희망넷 공동운영위원장)
15:45 - 16:00	프롤로그	"청소년이 바라본 학교폭력 문화의 자화상"
16:00 - 16:25	발제	"왜 같은 일이 반복되는가" - 박종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생생활국장)
16:25 - 16:30	휴식	
16:30 - 17:15	지정 토론	"학교 폭력문화에 대한 다양한 진단" [토론 1] - 학교폭력, 경쟁교육이 나은 기형아 고유경 (전국참교육학부모회 상담실 상담국장) [토론 2] - 학교폭력 사례분석과 사회적 성찰, 대안을 위한 시도 문재현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소장) [토론 3] - 잔혹교육이 학교폭력 부른다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 활동가)
17:15 - 17:50	전체 토론 마무리	- 질의 응답 - 전체 토론

발제 1 ‘왜 같은 일이 반복되는가?’¹⁾

박 종 철 (전교조 학생생활국장)²⁾

대전에서 고등학생이 따돌림 피해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데 이어 대구에서도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광주에서도 학교폭력에 의한 자살이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온 사회가 충격 속에서 슬퍼하고 분노하고 있다.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학교가 살림의 공간이 되지 못하고 죽음의 공간이 되어버린 현실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 상황이 낫설지 않다. 2년여 전 ‘졸업식 뒤풀이 사건’ 때도 비슷했고 그 전에도 그랬다. 매번 학교폭력 문제로 사회가 떠들썩할 때마다 상황이 유사한 패턴으로 진행됐다. 언론은 ‘요즘 아이들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며 개탄하고 학교의 무능을 탓하는 기사를 쏟아낸다(“학교폭력에 미온적인 학교들”-12월 27일 YTN 보도 제목,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와 학교도 책임있다”-12월 28일 노컷뉴스 기사 제목). 이어서 정부는 긴급히 대책을 내놓고 관계 당국회의를 개최한다(“이주호 장관,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학교폭력·학생자살 예방 철저 당부”-12월 25일 교육과학기술부 보도 자료). 국회에서도 법령 제·개정을 논의한다(“[위험수위 넘은 학교폭력] 학교폭력 가해자, 전학 후 다시 못 온다… 교과위, 개정안 의결”-12월28일 국민일보 기사 제목). 이러다가 곧 잠잠해지고 피해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면 또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

왜 자꾸 반복되는 것일까? 아니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일까? 이 사회 전체가 무능하기 때문이다. 피해학생이 부모와 교사에게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흔히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거론한다. 그러나 이것뿐일까? 학생들은 이미 알고 있다. 말해봐야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언론의 호들갑이나 정부, 국회의 노력이 모두 형식적이라는 것을. 떠들썩한 시기가 지나가면 모두들 무관심해진다는 것을. 이 사회가 학생들에게 절망을 학습시킨 것이다.

□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언론은 주로 학교와 교사에게 책임을 돌린다. 그러나 학교와 교사가 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을 꼼꼼히 읽어보면 학교와 교사가 제대

1) 이 글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전교조의 공식입장은 아니라는 것을 밝혀 둔다.

2) 따돌림사회연구모임 부대표

로 대처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은 교사에게 어떠한 권한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다만 제20조 1항에서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을 뿐이다. 학교폭력 문제에 있어서 교사는 ‘알게 된 자’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면 교사는 신고만 하고 나머지는 학교에 맡길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담임으로서 보복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하고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해 답해야 하며 가해학생 학부모가 자녀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교사에게 책임을 추궁할 때 자기방어를 해야 한다. 가해학생의 친구들이 피해학생을 비난하지 않는지도 유심히 살펴야 한다. 교사를 무능력자로 만든 것은 법이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방어적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학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교육적 해결은 꿈도 꾸지 못한다. 기껏해야 가해학생을 징계할 수 있을 뿐이다. 가해학생 선도, 피해학생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처지도 못되고 상담교사들도 그러한 역할을 하기엔 역부족인 경우가 많다. 게다가 정부에서 학교폭력 안전도를 평가한다고 하니 안전한 학교처럼 보이기 위해서 있는 문제도 감추기 일쑤이다.

1. 가장 큰 책임은 국가에 있다.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는가? 국가이다. 정부는 문제가 터질 때마다 비슷한 대책들을 내놓으면서 책임을 회피한다. 결국 화살은 학교와 교사에게 집중된다. 매년 수많은 아이들이 학교폭력 피해로 자살한다. 이는 국가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일이다. 12월 2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내놓은 대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 **학교폭력 전문상담사 1,800명을 일선학교에 배치** - 현재 전문 상담교사 및 상담사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학교폭력 가해 피해 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 이뤄지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가? 숨어 있는 피해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상담실에서 내담자를 기다리기만 해서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 **공익근무 요원을 학교안전보호 보조인력으로 활용** - 배움터지킴이의 학교폭력 예방효과에 대한 검증부터 하기 바란다. 공익근무 요원을 투입한다고 해서 교실 내 일상적 폭력이 사라지겠는가? 장난으로 위장된 폭력이 발견되겠는가?

○ **매년 2회 학교폭력 피해조사를 실시** - 정부는 지금껏 제대로 된 통계조차 마련한 적이 없다.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수준이다. 그러니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하다. 그러나 기대감이 생기지 않는다.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현재 일선학교에서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부터 하기 바란다.

○ Wee 센터를 ‘학교폭력신고센터’로 지정 - 학교 밖에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이유가 “비밀누설, 보복에 대한 우려로 학교폭력을 해당학교에 신고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 때문이란다. 반문한다. 학교 외부에 신고센터 설치하면 보복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까? 신고센터는 신고를 받으면 해당 학생의 학교에 알릴 것이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할 것이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신고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대책이라고 내놓은 뻔뻔함에 말문이 막힌다.

이어서 12월 29일 보도자료³⁾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 ▣ 학생·학부모·교사 등 이해관계자가 학교폭력을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식을 전환**하고,
- ▣ 학교폭력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단위학교 차원의 역량과 **책임 강화**
- ▣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 사후 조치 강화**
- ▣ 학교 밖 학교폭력 전문기관, 전문가, 학부모 등 **외부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능력 강화 등

‘인식 전환’은 정책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책임 강화’는 국가적 차원의 책임은 방기한 차별 권한도 없는 학교에 더 무거운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것이다. ‘사후 조치 강화’는 예방이나 교육적 해결 노력보다는 손쉽게 처벌하겠다는 것이며, ‘외부 자원 활용’은 학교폭력이 그 특성상 학교가 해결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중심에는 학교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학교와 교사가 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해결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눈에 띄는 대책만 내세우며 면피하려 들지 말고

2. 교직원체도 책임이 있다.

학교폭력은 교육 모순이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이다. 공교육의 목적은 학생을 평화롭고 민주적인 사회의 주인으로 길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사회에서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배우고 가정에서 폭력에 익숙해지며 학교 또래 관계 속에서 폭력을 재생산한다. 사회와 가정이 썩어 있다면 학교는 그것을 올바르게 되돌려 놓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오히려 학교는 폭력을 증폭시키는 공간이 되어 버렸다.

교직단체는 학교폭력을 외면하거나 소극적이었던 태도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교직단체가 해야 할 일이다. 학교폭력으로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을 때 현장 실천으로부터 희망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교직단체가 할 일이다.

3) [이주호 장관, 시·도교육감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긴급대책 협의] 교육과학기술부, 2011. 12. 29 보도자료

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직원체는 그러한 역할을 해오지 않았다.

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전교조도 학교폭력의 해결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사업 목표와 내용 속에서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현장 실천을 제안한 적도 없고 정책 대안을 만든 적도 없다. 최근 핵심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는 학교 혁신 사업 속에서도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⁴⁾

교총은 더 말할 것도 없다. 12월 28일 보도자료([교총, 교원의 학생지도권 강화 및 학교폭력 대책 교과부에 건의])에 제시한 대책 대부분이 이미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의 재판이거나 유사한 것에 불과하다. 교과부가 2010년 1월 13일 발표한 “제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계획”, 2011년 1월 18일 발표한 “인성 및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과 교총 보도자료를 비교해 보라. 교총은 형식적인 보도자료를 통해 자기들이 마치 뭔가를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려 하고 있으며 현재 상황을 학생인권조례를 공격하는 데 악용하고 있다. 이번 보도자료의 내용 중 특징적인 것 또 한 가지는 학생지도(징계)권 강화, 남교사 증원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문제의 원인에 대한 기초적인 성찰도 없이 처벌과 통제를 강화하면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3. 언론도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주범이다.

언론은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데만 열을 올린다. 학교와 교사의 무능을 탓한다. 그러나 학교와 교사가 어떤 현실 속에 놓여 있는지 살펴보는 데는 관심이 없다. 언론이 학교폭력의 해결을 바란다면 학교를 무기력하게 만든 정부를 비판해야 하고 학교와 교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조명해야 한다.

□ 무엇을 해야 하는가?

1. 교실을 중심으로 예방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교사에게 권한을 주어야 한다.

이것이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다. 학교폭력은 학교 밖에서 투입되는 노력으로 없앨 수 없다. 학교 밖에서 투입될 수 있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제한된 조치뿐이다. 학생들의 왜곡된 인정욕망과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상호 인정의 문화와 평등한 우정의 관계로

4) 사실 전교조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온 것은 진보진영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사실과도 일맥 상통하는 것이다. 학생인권 운동가들도 교사나 학교로부터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이라는 구체적인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가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성을 파괴하는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 진보교육감들의 주요 교육 공약에서도 학교폭력 문제는 피상적으로 다루어져 왔을 뿐이다. 오히려 보수 진영에서는 처벌과 통제 중심의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기는 하지만 학교폭력 대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교육공약으로 이른바 ‘3무 정책’을 내세웠는데 이 중 하나가 ‘학교폭력 없는 학교’였다. 진보진영이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단정 지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학교폭력 대책’하면 ‘처벌’과 ‘통제’를 먼저 떠올리기 때문일 수도 있고 입시경쟁의 해소 등 거시적 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고 무의식 중에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만들지 않으면 학교폭력은 사라지지 않는다. 피해학생이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돌아오더라도 주변 학생들이 여전히 따돌리고 괴롭힌다면 다시 피해자의 위치에 돌아가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그것은 가해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교사만이 폭력을 양산하는 학생 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교육적으로 개입하여 평등하고 평화로운 교실을 만들 수 있다.

교사에게 가해 피해 학생에 대한 1차 조사권, 학부모 면담권이 주어져야 하며 학교폭력 전담기구⁵⁾와의 협의 하에 경미한 사안에 대한 중재권이 주어져야 한다. 그래야 교육적 해결이 가능하다.

2. 일상적 생활교육이 중요하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기저에는 학생들의 부적절한 가치관이 놓여 있고 그것은 사회로부터 학습된 것이다. 학생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센 힘을 가짐으로써 인정을 획득하려 하고 누군가를 고립시켜서 소속감을 얻으려 한다. 약한 친구를 괴롭혀서 주변 학생을 웃기고 이것으로 인정을 얻으려 한다. 이러한 학생문화 속에서 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화를 바꾸어야 부적절한 가치관도 바꿀 수 있다.

학생 문화를 바꾸고 부적절한 가치관을 바꾸려면 일상적 생활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일회성 프로그램으로는 학생 문화와 가치관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3. 담임교사의 생활교육 시간을 수업시수로 인정해야 한다.

담임교사는 매일 조회, 종례를 하고 체험학습을 이끈다. 학급회의를 지도한다. 개별적으로 집단적으로 학생을 상담한다. 그런데 이 중요한 교육활동이 모두 수업시수로 인정받지 못한다. 생활교육 시간을 수업시수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생활교육을 공식적 교육과정화 한다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성교육을 강조하지만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말하는 사람은 없다. 교사는 교과 지도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행정 업무를 처리하느라 바쁘다. 이런 구조 속에서 생활교육은 늘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가정을 포기하고 두 달 꼬박 밤늦게까지 상담을 하고서야 학급 아이들 모두 한 번씩 상담할 수 있었다”는 교사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

생활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출발은 담임교사의 생활교육 시간을 수업시수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학급자치활동을 일상화하고 우정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사례를 제공하면 생활교육이 활발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종종 학급 당 학생 수 감축이 핵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학급 당 학생 수 감축은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핵심적인 선행 조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학급 당 학생 수가 60명씩 되던 시

5)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4조 3항에는 “학교의 장은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전담기구를 실제 가동하는 학교는 거의 없다.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럴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담기구가 실질적인 활동을 하게 하려면 학교폭력 책임교사를 관련 부서장이 겸임하게 해서는 안 되며 따로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학생조사, 학부모 면담, 그 외 여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비담임일 필요가 있다. 또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가 필수적으로 포함되게 해야 한다. 그래야 담임교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절에 지금처럼 학교폭력이 심각했는가? 학급 당 학생 수가 우리보다 적은 나라에서도 따돌림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4. 협력적 해결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어떤 학교는 문제 해결과정에서 담임교사를 배제하며 어떤 학교는 담임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미룬다. 두 경우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담임교사, 학부모, 담당 부서, 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관리자가 협력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유명무실한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활성화하고 전담기구에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5.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하는 것을 권장해야 한다.

문제를 감추게 하는 **학교폭력 안전도 평가, 학교폭력 관련 정보공시 강화는 폐기되어야 한다.** 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국가는 노력하지 않고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은 잘 해결하면 잘 해결할수록 더 많이 드러난다. 해결된다는 믿음이 생기면 피해학생들이 입을 열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 사건의 발생을 막지 못했다고 해서 책임 추궁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흔히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이렇게 교사를 공격하는데 이번 대구 사건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생이 철저히 감추면 부모도 문제가 생긴 것을 알기 어렵다. 학교가 예방 교육을 소홀히 했다면 그것은 책임져야 할 일이지만 발생을 막지 못했다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는 도둑이 들지 못하게 예방하지 못했다면서 경찰에게 책임 추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교사와 학교가 이러한 책임 추궁에 노출되다보니 사건 발생을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모른 척 하게 된다.** 2005년 경남교육청에서 발간한 <학생 생활지도 길라잡이>가 큰 파문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교육청이 앞장서서 학교폭력에 대해 축소, 은폐를 유도했기 때문이다.⁶⁾ 이는 경남교육청이 분명히 잘못된 일이지는 하나 사건 발생 자체에 대해서 책임추궁이 가능한 현실이 이러한 상황을 유도했다고 볼 수 있고 현재도 이 상황은 변함이 없다.

6. 국가 책임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정부는 가장 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될 때마다 대책을 내놓은 시늉만 하면서 책임을 회피한다. 또한 학교폭력은 학교가 해결의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그 역할을 넘긴다.

교육과학기술부, 각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에 담당 부서(팀)를 설치해야 하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무책임을 적어도 교감에게 맡겨야 한다.

교과부와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장 단기적 계획을 세워야 하고

6) "사법절차상 복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해 숨진 상태라도 후송 중 숨진 것으로 하고 가급적 병원으로 옮겨서 사망 진단서를 떼어야 한다.", "수사기관이나 언론기관이 손쓰기 전 유서, 일기장, 편지 등을 찾아 사건 해결에 불리한 내용은 정리해 둔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물리적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물리적 조건을 만드는 것은 교육과정 개편, 예산 확보,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전문상담교사 양성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학교폭력 관련 연구활동 지원 및 양질의 연수 프로그램 개발, 교육자료 제작도 필요하다.

교육청은 지역적으로 나타나는 폭력 문제, 소위 일진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현행법을 통해서는 이 문제를 다루기가 어렵다. 문제가 발생하면 각 학교는 자기 학교 학생에 대해서만 조치하고 그나마도 자기 학교에 해당학생으로 인해 피해 입은 학생이 없을 경우엔 유야무야 넘어가기도 한다. 중학생에 의한 폭력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초등학교가 종종 있지만 중학교에서 가해학생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조치를 취했음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문제에 대해 교육청이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교육청은 담당부서에서 학교폭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 학생, 학부모에 대해 지원센터의 역할을 해야 한다. 단위 학교에 대응 역량이 없거나 단위 학교 수준에서 대응할 수 없는 문제인 경우 교사, 학생, 학부모,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해주어야 하고 교사 연수 실시,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 프로그램 운영,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가해학생을 보호 및 감독하는 것(지역 교육청) 등도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다.

학교(교장)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에 평화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담임교사에게 책임을 집중시키거나 생활지도부에 모든 것을 맡기는 식이어서는 안 되며 전담기구⁷⁾를 중심으로 관리자, 담임교사, 상담부, 생활지도부, 보건교사가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담기구의 실무책임은 교감이 맡도록 하며 예방 및 대처 계획 수립, 사건 조사 및 결과 보고 역할을 수행한다. 학교장은 보고내용을 바탕으로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하되 전담기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담임교사 차원의 지도로 마무리 지을 수도 있고 선도위원회를 통한 처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한 조치를 결정할 수도 있다. 학교장은 학부모의 부당한 인권침해로부터 담임교사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7. 학교평화법 제정

학교폭력의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폭력 문제만 보아서는 안 된다. 학생의 왜곡된 인정욕망이 다른 학생을 공격하면 학교폭력이 되는 것이고 교사를 공격하면 수업 방해 행동이 된다. 자기 자신을 공격하면 우울증이 된다. 인정욕망의 좌절은 무기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교사-학생 간 평화, 학생-학생 간 평화를 위해 학교평화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학교평화법에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내용, 학생의 권리(인권 포함), 교사의 권리(인권 포함), 학부모의 권리를 담아야 한다.

7)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14조 3항에서는 학교장에게 전담기구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 “학교의 장은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현행 법률은 전담기구에 담임교사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지만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가 포함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당장 학교평화법을 제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면 시급하게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 것들부터 현행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포함해야 한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가해학생에 대한 징벌적 조치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이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조치이며 보복 등 2차적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아야 한다. 지역교육청 등에 가해학생 보호시설을 마련하고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곳에서 교육받고 지낼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앞서 지적한 것처럼 교사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그래야 교사의 책임도 명확해 질 것이다.

○ **현행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개정하여 크게 징계조치 및 교육별로 양분하고 징계조치에 교육벌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징계조치에 해당되는 것과 교육벌에 해당하는 것이 뒤섞여 있다. 징계조치는 재발 및 추가 피해자 발생을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서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격리, 배제의 성격을 띤다. 교육벌은 가해학생의 반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교육적 조치이다. 둘째, 양형 기준이 없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 똑같은 행동을 했음에도 어떤 학교에서는 출석정지를, 어떤 학교에서는 퇴학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셋째, 징계로서의 권위가 없다. 전학조치를 두려워하지 않는 학생들도 많다. 그래서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최근 경찰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구속수사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가해학생들에게 피부로 느껴지는 두려움이 될 수 없을뿐더러 처벌 위주의 정책으로서 교육적 효과보다는 사회적 격리를 지향하는 것이다. 심각한 폭력이 아니라면 가능한 학교 안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징계조치와 교육벌로 양분하는 것을 통해 징계 및 교육벌의 권위를 높이고 교육적 해결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징계조치		교육벌
징계 내용	양형 기준 ⁸⁾ (예시)	- 상담
출석정지	3회 이상 반복적으로 폭력이 일어난 경우	- 가해학생과 그 부모가 연서명한 재발방지 서약서 제출(학교, 피해자 보관)
학급교체	5회 이상 폭력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경우, 집단 폭행의 동조자	- 공개사과(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발생한 폭력의 경우)
전학	집단 폭행의 주요 가해자, 피해학생의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강제이발, 강제 취식, 강제로 싸움 시키기 등) ※ 전학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부모와 함께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함.	- 교내봉사활동(학교에서 관리) - 사회봉사활동(교육지원청

퇴학	전학조치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해행동을 하는 경우	에서 관리)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 치료 ※ 상담, 재발방지 서약서, 공개사과, 3일 이내의 교내 봉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없이도 담임교사가 부과할 수 있다.
----	----------------------------	---

다양한 교육별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 한 예로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발생한 폭력의 경우 가해학생에게 공개사과를 부과해야 한다. 단, 학교는 가해학생이 공개사과에 대해 자발적으로 동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해학생들은 단지 폭력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학생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 대개의 경우 피해학생을 괴롭힘으로써 인정욕망을 충족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피해학생이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심리적 상처를 크게 받는 이유는 **수치심** 때문이다. 이를 학생들 표현으로는 가해학생이 다른 학생들 앞에서 피해학생에게 “짹주기” 때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쪽팔리게” 하기 때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공개사과는 두 가지 교육적 의미가 있는데 첫째, 수치심으로 인해 무너진 피해학생의 자아 존중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가해학생에게 폭력적인 방식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그런데 공개사과에 대해서 가해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가해학생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않고 부과하는 공개사과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인권침해로 규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형사범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도 범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 그러나 그를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은 그래야 피해의 확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이다. 피해학생의 또래관계를 파괴하는 학교폭력의 특성상 가해학생에게 공개사과를 부과하는 것은 다소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인권침해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인권은 피해자의 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가해자의 인권을 지켜주는 것이 피해자에게 더 큰 폭력이 되어 돌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생활기록부에 품행을 기록하는 란을 만들고 가해학생의 가해 내용 및 처분결과, 이후 행동 변화를 기록해야 한다.** 단, 교사들만 열람 가능하도록 하고 외부에서는 확인할 수 없도록 차단해야 한다. 가해학생이 진급을 하거나 전학을 가더라도 새로운 담임교사가 학생지도에 참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8) 다양한 사건들을 수집하여 유형별로 분류하고 피해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 재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학교장의 결재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가해학생 및 그 부모, 피해학생 및 그 부모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는 법원에서 판결문을 작성하여 전달하는 것과 비슷하다. 많은 학교에서 처분결과만을 통보한다. 담당자가 바쁜 것이 이유일 수도 있고 굳이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처분결과는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어야 한다. 그래야 처분결과에 대한 권위도 생길 수 있다. 사건 내용, 처분의 이유 및 근거 조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8. 교육운동(전교조) 무엇을 할 것인가?

- 정책적 대안 생산(법령 개정, 시스템 구축, 생활교육과정 도입 등)
- 원격 연수, 집합 연수 등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급
- 생활교육 연구 소모임 조직
- 학교혁신 운동의 주요 과제로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를 설정
- 공동실천 제안(공동실천 매뉴얼 제작)

[참고 자료]

따돌림,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이렇게 만듭시다⁹⁾

박종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생생활국장)

□ 학교폭력을 둘러싼 학생, 학부모, 교사의 현주소

1. 학생

교실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 아니다. 늘 불안 속에서 긴장해야 하는 공간이다. 새 학년이 되고 3월 한 달 동안은 극도의 긴장 속에서 살아간다. 상대적으로 폭력 사건 발생이 적은 고등학교 교실도 바를 바 없다. 어떤 학생은 3월만 되면 배가 아프다고 하고 어떤 학생은 적응하기 힘들어서 전학가고 싶었노라고 학년 초를 회상한다. 이 같은 긴장감의 정체는 무엇일까?

“외톨이가 되지 않을까?”

“친구가 없으면 어떡하지?”

“따가 되는 건 아닐까?”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된다. 누군가의 목소리는 커지고 누군가는 외톨이로 지낸다. 외톨이들은 쉬는 시간이 되면 엎드려 있거나 교실 밖으로 나간다. 점심시간에는 혼자서 밥을 먹는다. 외톨이는 따돌림의 대상이 된다. 학생들은 혼자 지내는 친구를 보며 그냥 그러려니 하지 않는다.

“재 왜 저래?”

“재 따인가 봐.”

어른들은 자기들이 학교 다닐 때도 힘 센 학생과 약한 학생이 있었고 폭력은 있었다고 말한다. ‘애들은 싸우면서 자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른들이 학교 다닐 때는 약한 학생들에게도 친구가 있었다. 센 학생들이 약한 학생의 친구 관계까지 파괴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약한 학생에게는 친구가 없다. 약한 학생과 친구가 되면 함께 따돌림을 당하기 때문이다.

2. 학부모

학부모는 내 아이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까 불안해한다. 아이에게 물어봐도 아이가 속 시원히 답을 하지 않아 답답하다. 혹시 아이가 솔직하게 말을 하여 문제를 알게 됐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하다. 가해학생을 직접 만나서 혼내고 타이르고 싶지만 그랬다가 아이가 보복을 당할까 두렵고, 학교에 얘기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그러다가 문제가

⁹⁾ 2011. 5. 18에 전교조 서울지부, 서울교총, 서울시교육청 생활지도 자문위원회의 공동주최로 열린 [생활교육 혁신 토론회 두 번째 - 따돌림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에서 발표한 글이다.

터지면 그동안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던 자신에 대한 분노, 혼자서 괴로워했을 아이에 대한 미안함,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지 못하는 학교에 대한 원망, 가해학생과 그 부모의 뻔뻔함에 대한 분노 등으로 괴로워한다.

3. 교사

어떤 교사는 학부모에게 공격받는다. 가해학생 학부모도 담임교사를 공격하고 피해학생 학부모도 담임교사를 공격한다. 공격하는 내용은 비슷하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선생님은 뭐 하셨어요?”

학교폭력 사건은 특성상 미리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그런 사정을 알 리 없는 학부모는 책임을 담임에게 돌린다. 학교폭력에 관해 어떠한 권한도 없으나 책임은 져야 하는 상황은 교사를 방어적으로 만든다.

어떤 교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가해학생을 불러 반성문 한 장 쓰게 하고서는 사건을 마무리 짓는다. 심지어 피해자에게 “네가 뭔가 원인을 제공했으니 이런 일이 생기지. 너에게도 책임이 있어.”라고 말하며 화해를 강요하기도 한다. 가해학생은 반성문을 쓰면서 담임교사 앞에서 반성하는 척한다. 그리고 돌아서는 순간 웃음 짓는다. 교실에 다시 돌아가도 가해학생은 전혀 위축되지 않는다. 자기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이제 피해학생은 더 은밀한 폭력에 시달리게 된다.

어떤 교사는 안절부절 못한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가해학생은 발뺌하고 피해학생은 고통스러워한다. 학부모는 담임교사를 공격한다. 사실을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문제가 재발하지 않는지... 도무지 오리무중이다.

□ 학교폭력 재개념화의 필요성

고등학교 교사들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학교폭력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일까? 어떤 현상에 대해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일까? 초등학교나 중학교와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일까? 교사들의 경우 사건화 되지 않는 일상적인 따돌림이나 괴롭힘에 대해서는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든 있을 수 있는 일’, ‘애들은 싸우면서 자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일례로 이런 일이 있었다.

수업 분위기는 좋지만 여학생 7~8명이 무리를 지어 다른 학생들과 배타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학급이 있었다. 그들의 수업을 듣는 자세는 대체로 나쁘지 않았으나 서로 자주 눈빛을 주고받았고 자기들이 싫어하는 학생이 교사의 질문에 답을 하면 은근히 비웃음을 흘렸다. 그 중 두세 명은 모여 앉아서 떠들다가 교사에게 지적을 받으면 노골적으로 싫은 티를 내기도 했다. 담임교사나 그 학급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이런 상황을 어렴풋이 느끼고는 있었으나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학생들 대부분이 이 상황에 대해 꽤나 불편해 하고 있었다. 그 여학생들 역시 다른 학생들이 자기들의 행동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 때문에 본인들도 힘들어 했다. 서로가 서로를

따돌리고 싫어하는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그 여학생들 사이에서도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이 생겨났다. 사실 무리 내의 다른 학생들은 그 여학생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았다고 했다. 그렇지만 자기들 안에서도 따돌림이 발생하면 웃음거리가 될까 두려워 참고 지냈던 것이다. 무리에서 따돌림을 당한 학생은 학급 내 어느 누구와도 친하게 지낼 수 없었기 때문에 학교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다. 다행스럽게도 며칠 후 서로 화해하면서 그 여학생이 다시 등교하기 시작했지만 내부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렇게라도 지내는 것이 서로에게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같이 다니는 것뿐이었다.

이런 상황들은 고등학교에서도 흔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교사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나 교사가 지도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 한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 있는 학생들의 심리는 어떨까? 학생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2년 전 답임을 맡았던 학급은 학생들 간 분위기가 좋은 편이었다. 다만 학년 초 서로에 대해 탐색하는 시간이 길었다. 3월 한 달 동안은 서로 말도 잘 안 했고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러다가 3월 말에 단합대회를 하면서 급격하게 친해졌는데, 몇 달이 지난 뒤에 우연히 얘기 나누면서 아이들이 3월의 긴장감을 엄청난 스트레스로 느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두세 명은 심각하게 자퇴를 고려했다고 했다. 아이들은 자칫하다가는 따돌림을 당할 것 같아서 자기를 드러내기가 두려웠고 과연 친구를 사귄 수 있을까 걱정스러웠다고 했다. 3월의 우리 반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따돌림에 대한 불안이 평화로운 관계 맺기를 방해했다고 할 수 있다.

학교폭력은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할 수도 있다. 눈에 보이는 폭력 사건만을 폭력이라고 한다면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까지는 심각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관계가 불평등해지고 누군가가 그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는 것을 모두 학교폭력이라고 한다면 학교폭력은 급별, 지역 상황이나 평준화 여부와 상관없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는 적절한 용어가 아닐 수도 있다. 학생들처럼 직접적인 폭행이 있어야 학교폭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따돌림과 학교폭력을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무시, 무관심 등은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것이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되 그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학생들이 학교를 매개로 해서 맺은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학교폭력이라고 정의한다.¹⁰⁾ 우발적이거나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갈등이나 폭력은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갈등이나 폭력을 포함한다. 다수의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포함한다. 주변 학생들의 지속적인 무관심이나 무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학급 상황 등도 당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므로 학교폭력에 포함한다. 학교폭력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면 한국의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많은 학생들이 평화롭지 못한 교실에서 두려움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인정받고자 하는 속성이 있

10) <학교폭력의 재개념화>, 김경옥

다. 그런데 학교폭력은 신뢰를 파괴한다. 또한 인간관계를 다른 목적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게 한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생들은 폭력적 관계 맺기 방식을 내재화하게 되고 무기력, 공포, 공격성을 갖게 된다. 이는 학생들의 다른 관계에도 전이되고 성인이 되어도 영향을 미친다.

□ 학교가 무능하다? 이 사회가 무능하다!

지난 해 졸업식 뒤풀이 사건이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면서 올해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졸업식을 축제로 운영하라고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냈고, TV에서는 졸업식에 경찰력을 투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주제로 열띤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졸업식 뒤풀이, 빵셔틀, 피해학생의 자살, 집단폭행..... 이런 사건들이 보도될 때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학교는 뭘했냐?’는 질타도 함께 따라온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부각될수록 학교는 더 무능한 곳으로 비춰진다. 학교는 정말 무능한가? 학교폭력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보면 학교는 무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본 교사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고 문제 해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답답해한다. 학교가 무능하다면 학교가 유능해지도록 해야 한다. 교사들이 겪은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교과부, 교육청, 교장, 경찰, 사법부, 상담기관, 언론 그 누구도 학교가 유능해지도록 돕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학교가 유능해지도록 돕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도 무능하기 때문이다. 무능한 것은 학교만이 아니다. 이 사회 전체가 무능하다고 표현해야 정확하다.

교과부는 교사 연수 강화, 예방 교육 강화, 상담교사 확대 배치, CCTV 설치 확대, 학부모 안심 알리미 서비스 실시 등을 하겠다며 분주하게 대책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다. 교육청도 비슷하다. 경찰은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 스쿨폴리스 제도 도입 등을 통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민간 기관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상담, 교사 연수 등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학교폭력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다. 언론은 학교폭력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각자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는데 왜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까? 첫째는 무능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각자 자기 이해관계에 의해서만 움직이지 협력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지는 않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언론, 정부정책, 법률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1.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데만 관심 있는 언론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은 자극적인 보도를 하는 데 관심이 있을 뿐 문제 해결에는 별 기여를 못하고 있다.

“심각한 초등생 폭력, 연령 낮아지고 수위 높아져”

“은밀하고 집요한 ‘사이버 폭력’, 피해망상 환청 등 더 큰 후유증”

“상위클래스 평민 쪼파 중, 학생간에 권력 피라미드”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학교폭력 관련 기사의 제목들이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각성을 강조하거나 피해자의 상처가 크다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대책에 대해서는 하나마나한 피상적인 언급만 할 뿐이다. “언어심리적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 “학생들에게 폭력의 문제점을 제대로 교육시키고, 본인이 폭력을 당했거나 친구의 학교폭력 모습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 올바른 대응요령을 알려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지식위주의 교육에서 인성교육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와 같은 말이 그것이다.

언론은 학교폭력의 원인이나 교과부 정책 등에 대한 심층 분석, 학교와 교사가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교과부, 교육청, 경찰, 사법부, 상담기관 등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제시 등을 통해 생산적인 담론 형성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2.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학교폭력 대책은 2010년 1월 14일에 발표한 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 평가해보자.

2010년에 발표한 계획은 2차 계획이다. 그 전에 1차 5개년 계획이 있었다는 것인데 2차 계획은 1차 계획에 대한 평가 위에서 새로운 현실을 반영하여 만들어 졌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차 계획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차 계획에서 추진되었던 정책들 중 실효성이 없는 정책들이 2차 계획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자면 현실에 대해 세밀하고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현실 파악을 위한 통계자료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다. 민간 기관인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그 설문조사라는 것도 학교폭력의 원인과 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것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의 의식을 파악한 것에 불과하다.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가정폭력, 폭력적인 게임, 폭력을 미화하는 영상매체 등을 들고 있는데 이는 설문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다. 학교폭력의 집단화가 심각하다는 분석도 새로운 것이 아니다. 학교폭력은 본래 피해자를 집단적으로 고립시키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표면적 현상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학생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교사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분석해야 한다. 그래야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 CCTV 설치 확대, 배움터 지킴이 배치 확대, 학부모 안심 알리미 서비스 실시

대표적인 것이 바로 CCTV 설치 확대, 배움터 지킴이 배치 확대다.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CCTV가 있어서 학교폭력이 줄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CCTV가 부족해서 문제인가? 아니다. 학교 폭력은 CCTV를 비웃듯이 그것이 없는 곳에서 이루어진다. CCTV로 뺑서들을 잡을 수 있을까? 졸업식 뒤풀이 현장을 잡을 수 있을까? 모 방송에 출연한 어떤 단체 사람은 복도에도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복도에 설치하면 아이들은 복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 폭력을 저지를 것이다.

배움터 지킴이도 마찬가지다. 학교폭력은 학교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학교에서 맺어진 관계를 바탕으로 학교 밖에서도 일어난다.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에 학교와 주변을 순회하는 것은 의미 있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배움터지킴이에 대해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잘 등교했다고, 하교했다고 문자서비스를 하면 학교폭력 예방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등교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폭력, 하교 후 일어나는 폭력을 문자서비스로 막을 수 있을까? CCTV나 배움터지킴이, 학부모 안심 알리미 서비스의 효용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바로 답을 얻을 수 있다. “CCTV나 배움터지킴이, 학부모 안심 알리미 서비스가 학교폭력을 예방한다고 생각하나요?”라고

☑ ‘경미한’ 폭력행위에서 대해서도 학교차원에서 개입

교과부는 “담임교사 차원에서 지도되던 ‘경미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학교차원에서 개입”하겠다고 하였다. 얼핏 보면 어떠한 폭력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궁금하다. 도대체 ‘경미한’ 폭력이 무엇인가? ‘경미한’ 폭력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교과부는 “언어폭력, 위협적 행동 등 기존 담임의 생활지도 차원에서 다루어졌던” 폭력을 ‘경미한’ 폭력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는데 언어폭력이나 위협적 행동도 집단적으로 일어났느냐, 얼마나 지속적으로 일어났느냐, 동조하는 학생이 얼마나 있었느냐에 따라서 ‘경미’할 수도 있고 심각할 수도 있다. 결국 그 판단 기준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쉽게 판단내리기 어렵다.

학교차원에서 개입하겠다는 것은 담임교사의 역할을 배제하겠다는 얘기와도 같다. 현행법이 교사의 역할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담임교사의 역할을 배제하게 되면 학급차원의 교육적 지도가 어렵게 되고 가해자에 대한 개별적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끝나기 쉬울 것이다.

모든 학교폭력에 대해서 담임교사의 역할을 배제하고 학교 차원에서 개입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담임교사와 관련부서가 협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학교폭력 관련 정보공시 상세화, 학교폭력 안전도 평가

이런 정책을 도입한 취지는 충분히 알 수 있다. 학교가 문제를 자꾸 감추려 한다는 것이다. 감추려 하니 강제로 공개하게 하고 평가하겠다고 하면 감추는 일이 줄어들까? 오히려 있는 문제도 무마하여 아무 문제없는 것처럼 하지 않을까? 학교폭력 안전도가 낮은 학교로 소문이 난다면 학부모들이 그 학교에 학생을 보내고 싶을까?

☑ 교과부의 정책은 피해자와 가해자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학교폭력이 왜 발생하는지,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어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 정부의 대책을 보면 여전히 피해자와 가해자 중심으로 사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치유 프로그램을 투입한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학교폭력은 학급 내에서 맺어진 관계로부터 비롯된다. 가해자는 적어도 피해자보다는 권력관계에서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가해자가 처벌을 받고 피해자가 치유받는다고 해도 이 관계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므로 가해자도 피해자도 이 관계에 다시 편입되기 쉽다.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았다면 가해자는 더욱 교묘하게 피해자를 괴롭히게 될 것이다. 반성했다고 해도 학급 내 권력관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더라도 ‘센 척’을 해야 한다. 피해자는 교실 밖에서 상처를 어느 정도 치유했다고 하더라도 교실로 다시 돌아오는 순간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다시 폭력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기를 무시하는 시선 속에서 숨죽이고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하려면 가해자와 피해자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3. 법률의 문제

☑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조장,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서 제시된 예방활동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제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교육과학기술부에 설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시·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교)에서 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동 법률 15조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기도 하다.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령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예방관련 조항은 11조이다.

제11조 (학교폭력예방교육)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되, 교육 횟수·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2. 학급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3. 학생과 교직원을 별도로 교육함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다.
4. 강의,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되,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법률에서는 국가나 지방단체,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관련 책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선언적이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학교폭력 예방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발생한 사건을 잘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활동이 더욱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예방활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 교사를 방어적으로 만들고 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은 교사에게 어떠한 권한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다만 제20조 1항에서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을 뿐이다. 학교폭력 문제에 있어서 교사는 “알게 된 자”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이 때문에 교사연수에서도 즉시 신고하라고만 하고 절대 개입하지 말라고 강조한다. 신고 이외에 한 가지 더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록이다. 학부모가 책임을 물을 때를 대비하여 평소 생활을 관찰하고 기록해 두라는 것이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교사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기 쉽다. 교사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가운데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을 더욱 은밀하게 괴롭히고 피해학생과 피해학부모의 상처는 깊어만 간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담임교사는 신고하고 지켜보기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특히 학급 내 폭력 사건의 경우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를 일상적으로 대면하고 지도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이 때문에 대개의 담임교사들은 문제 발생을 인지하게 되면 피해학생, 가해학생을 만나 사실을 파악하고 학부모에게 알린다. 그런데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학부모들은 지도과정에 문제가 없었더라도 담임교사에게 책임을 묻는다.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가진 교사도 자신의 노력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소극적으로 변하게 된다. 법이 교사를 방관자로 만드는 것이다. 협력적 문제 해결 구조 속에서 담임의 권한과 책임이 적절히 부여되지 않으면 담임교사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방어적인 자세로 임할 수밖에 없다.

☑ 각각의 역할,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하다.

사건이 법정 다툼으로까지 가는 경우 해당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불분명하여 판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판례에 의존한다는 것은 판사의 판단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판례에 의존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학교와 교사의 책임이 어디까지인가?’하는 문제이다. 판례는 예방교육을 했다는 최소한의 증거 자료만 있으면 교사와 학교의 책임을 면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학교에서 예방교육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으며 문제를 축소은폐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 같은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2002년에 경남교육청이 만든 <생활지도 길라잡이>에 드러나 있다. 이 책자에서 경남교육청은 학생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하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2005년에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적잖은 파문을 일으켰다.¹¹⁾ 국가, 교육청, 학교, 교사

의 역할과 권한, 책임을 명확히 하면 그것에 근거하여 예방활동을 하고 사건을 처리할 수 있으며 사건의 은폐축소를 방지할 수 있다. 법정 다툼으로까지 가는 것을 일정하게 방지하는 효과도 생길 것이다.

☑ **법률이 개정되었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2011년 4월 29일 국회에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에 관한 신고 또는 보고를 받은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장소·출석위원·토의내용·의결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회의록을 신청자에게 공개하도록 함(안 제13조제3항제21조제3항 단서 신설).
- 학교의 장은 연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홍보물을 제작하여 학부모에게 배포하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신설).¹²⁾

법률의 개정 이유에 대해 배은희 의원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질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소개해 달라.

답변 : “현재 각급 학교에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설치돼 있는데,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현재 학폭위 위원은 5~10명으로 둘 수 있는데 사실상 선생님들이 거의 모든 위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학폭위에 학부모 대표가 과반수 이상 참여할 수 있게 강제했다. 또한 비공개로 진행되던 회의를 공개로 전환하고, 회의 소집도 피해학생 혹은 그 보호자가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질문 : 학폭위에 학부모들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것이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라고 할 수 있나.

답변 : “현재보다는 확실히 낮지 않겠다. 현재 실정으로는 학폭위에 학부모 대표가 평균적으

11)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2005년 4월 29일 오마이뉴스 기사 - <충격적인 학생폭력 사망 대처방안>)를 볼 것.

12)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 홈페이지

로 한 명 정도만 참여하고 있어 교장이 임명한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는 위원회가 사건을 축소-은폐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학폭위에 학부모가 과반이상 참여하게 되면 회의에 대한 감시, 감독과 의견 개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¹³⁾

인터뷰 내용에서 드러나듯 이번 개정안은 학교에 대한 불신을 전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사와 교장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여 “학교에 유리한 심의”¹⁴⁾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인식의 바탕에서 “학폭위에 학부모가 과반이상 참여하게 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

드러나는 현상을 놓고 보면 타당한 판단인 것처럼 보인다.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의 학교폭력 처리 건수를 조사하는데, 어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2009년에 단 한 건의 폭력 사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인근의 다른 전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세 건만 처리됐다. 그 인문계 고등학교 아이들은 학습 의욕이 없고 공격성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야 할 만큼의 폭력 사건이 1년 동안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그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교사와 교장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기 때문일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에 불과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야 옳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한 학교폭력 사건 처리 건수가 적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는 학교폭력이 심한 학교라는 소문을 두려워한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은 교장과 교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학부모 역시 두려워한다. 내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학교폭력이 심한 학교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학부모가 얼마나 있을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학부모가 과반수 참여한다고 해서 축소, 은폐가 줄어들까? 학부모 과반수가 참여하면 달라질 것이라는 판단은 학부모의 이해관계와 학교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의 명예” 앞에서 양측의 이해관계는 별다르지 않다.

둘째, 사건의 진실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증거가 없는 폭력 사건도 많이 발생하는 데 이 경우 가해자가 발뺌하면 가해사실을 증명할 수가 없다.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가해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가해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 피해자는 고통스러워하지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학부모는 학교가 축소, 은폐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학교는 어쩔 도리가 없다.

셋째, 담임교사 선에서 거칠게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폭력 사건이 교실상황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섬세하게 접근해야 하고 학급 아이들 전체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지만 가해자에게 반성문만 한 장 쓰게 하거나 가해자를 몇 대 때리는 것으로 끝내는 담임교사들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처리할 경우 피해자가 더욱 고립되거나 가해자로부터 보복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하지만 담임교사들은 자기 학창시절을 떠올리며 ‘애들은 싸우면서 자라는 거야.’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넷째, 가해자와 피해자가 폭력 사건을 감추기 때문이다. 가해자는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사건을 축소한다. 피해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담임교사와 학교, 학부모가 제대로 처리해줄 거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피해사실의 전모를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13) <배은희 "초등교에 왕따가 단 한건 없다고?>, 신동규 기자, 2011. 4. 3 데일리안 인터뷰 기사에서 인용

14)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 블로그에서 인용

이유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학부모의 참여가 확대된다고 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

학교폭력 문제만 보아서는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없다.

주현이는 선생님들에게 피하고 싶은 존재이다. 몇몇 수업시간을 제외하면 대체로 주변 아이들과 잡담을 하면서 수업을 방해한다. 주현이는 3분단 맨 뒷자리에 앉아있는데 때로는 1분단 앞자리에 앉아있는 선호와 얘기를 주고받기도 한다. 강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아랑곳 않는다. 참다못한 선생님이 조용히 하라고 지적하면 떠든 적 없다고 잡아떼다. 화가 난 선생님이 분명히 떠든 것을 봤다고 하면 떠든 게 아니라 잠깐 뭘 좀 물어봤을 뿐인데 왜 화를 내나면서 오히려 목소리를 높인다. 다른 아이들은 주현이와 교사의 갈등상황을 즐긴다. 주현이도 아이들에게 주목받으며 교사를 난처하게 만드는 것을 즐긴다.

주현이는 주도적으로 현수를 괴롭힌다. 가위바위보해서 꿀밤 맞기를 하자고 자꾸 채근한다. 현수가 끝까지 안 하겠다고 하면 용기 없는 놈이라고 놀려댄다. 놀림을 받기 싫어서 현수가 동의하면 자기가 이길 때까지 가위바위보를 해서 현수를 세게 때린다. 계속해서 자기가 지면 트집을 잡아서 현수를 때린다. 학년 초에 현수는 수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는데 지금은 수업시간에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며 쉬는시간에는 엎드려 있거나 교실 밖으로 나간다. 점심시간에는 혼자 건물 밖 벤치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다.

현수를 괴롭힌 책임을 물어 주현이를 선도처분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주현이는 교사를 난처하게 함으로써, 현수를 웃음거리로 만듦으로써 친구들에게 인정받는다고 생각한다. 주변 학생들은 주현이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반응함으로써 또는 주현이를 두려워함으로써 주현이의 행동을 강화한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은 주현이를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으로만 바라본다. 그러나 주현이가 일으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가해행동에 대한 상담뿐 아니라 주현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교육적 조치 문제, 수업 상황에서 교사의 교육적 지도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 주현이의 행동에 동조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도 문제 등이 그것이다. 현행 법률은 주현이 문제의 핵심을 건드리지 못한다. 법률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만 규정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역설적이지만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학교폭력법의 한계를 뛰어 넘는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학교폭력 바로 보기

1. 학교폭력에 대한 오해

☒ 애들은 다 그렇게 싸우면서 자라는 거야 - 학교폭력은 통과의례?

사람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 갈등이 있기 마련이다. 서로의 이해관계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갈등 그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애들은 다 그렇게 싸우면서 자라는 거야.”라는 말이 “사람은 갈등을 겪으면서 성장한다.”는 의미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단순한 갈등관계도 아니고 동등한 친구 사이의 싸움도 아니다. 학교폭력은 학생 간에 이해관계와 가치관이 달라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이해관계나 가치관이 달라서 발생하는 폭력의 경우에도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폭력으로 쉽게 변질된다. 가해자는 다른 학생들로부터 주목받고 학급 내 권력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든다. 피해자는 고립되고 대인관계에서의 자신감을 잃는다. 한 번 피해자가 되면 학년이 바뀌어도 계속 피해자로 살게 되는 경우가 많다. 다른 학급에 소문이 나면 이른바 전파¹⁵⁾가 되기도 한다. 학교폭력은 학생들 모두에게 폭력적인 관계 맺기를 학습시킨다. 우정의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고 친구를 의심하게 한다. 학교폭력은 성장통이 아니다.

☒ 피해자에게도 무슨 문제가 있었겠지.

때로 성인들은 피해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따돌림이나 폭력을 당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 어떤 따돌림 피해자는 단지 키가 크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으며 조금 더 내성적인 성격이나 외모 등이 폭력의 이유가 되는 경우도 많다. 학생들은 때로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을 건전하게 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획득하는 것을 통해 풀고자 한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우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따돌림이나 폭력의 대상을 찾는다. 어떤 학생이 따돌림이나 폭력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그것은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이라기 보다는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서 따돌림이나 폭력의 구실을 찾아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설사 피해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따돌림이나 폭력이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가 따돌림이나 폭력 행위를 정당화해주는 것은 아니다. 성인들이 피해자에게도 문제가 있어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면 사건을 둘러싼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할 수 있고 때로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다.

2. 학교폭력의 특성

☒ 일상적 폭력의 반복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폭력 사건은 거의 없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폭력이 반복되고 누적되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어깨뽕, 싫어하는 별명 부르기, 피해자와 짝이 된 아이 놀리기, 식판 치우게 하기, 밥 대신 반게 하기, 웃음거리로 만들기, 모여서 쑥덕거리며 쳐다보기..... 이런 일상적인 폭력은 흔히 장난으로 위장된다. 교사가 지적이라도 하면 “장난인데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여 교사를 순식간에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 당하는 학생까지 장난이라고 말하면 교사의 처지는 우스워진다.

☒ 집단성(피해자의 고립)

¹⁵⁾ 전교생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것을 이르는 말

일단 누군가가 피해자로 찍히면 그 학생은 집단적인 공격 대상이 된다. 희생양이 탄생하는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괴롭힌다. 괴롭히는 사람이 다수가 되면 죄책감은 분산된다.

어른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다. 자기가 자랄 때도 폭력은 있었고 그것은 자라는 과정에서 겪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시절의 폭력과 지금의 학교폭력은 다르다. 그 시절엔 싸움 잘하는 학생에게 맞은 학생도 친구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폭력 피해자는 철저히 고립된다. 누군가가 피해자를 도와주면 그 학생도 함께 폭력의 대상이 된다. 자라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기에는 피해자가 감내해야 할 고통이 너무 크다.

☑ 관계의 전반적인 파괴

언제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 오늘은 가해자이지만 내일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오늘의 절친이 내일은 나를 배신하고 나를 괴롭힐 수도 있다. 피해자를 도와주었다니 피해자가 가해자 편에 서서 나를 괴롭힐 수도 있다. 누구도 진심으로 믿을 수 없고 누구도 나를 믿지 않는다. 늘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3. 학교폭력 이렇게 바라보자.

☑ 학교폭력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학생인권 문제

지난 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했고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 등 몇 군데의 시도 교육청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논의가 활발하다. ‘무상 급식’과 함께 ‘학생인권’은 2010년 교육계의 뜨거운 이슈였고 이 분위기는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현재의 학생인권 담론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다. 현재의 학생인권 담론은 학생 개인의 자유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인권을 억압하는 학교에 대한 학생의 권리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런데 학생 인권을 억압하는 것은 학교와 교사뿐일까?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없을까?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인권을 집단적,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것, 이것이 학교폭력이다. 학생들은 서열화된 권력 구조 안에서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하면서 힘겹게 생활하고 있다. 왜곡된 권력 구조 안에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대다수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직간접적 피해자이다. 오늘의 가해자가 내일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자기보다 강한 학생에게 피해를 당하면서 약한 학생을 괴롭히는 경우도 많다. 학교폭력은 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인권인 ‘안전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시급한 학생인권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폭력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까? 언급하고 있기는 하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6조 1항에서는 "학생은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3항에서는 "학교와 교육감은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선언적 조항의 삽입이 현실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제11조 2항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경우 조항이 현실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 것과 대

비된다.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권리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사건 중심으로 보지 말고 관계 중심으로 보아야 제대로 보인다.

사건 중심으로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만 보이지만 관계 중심으로 보면 학급 내 권력관계가 보인다. 가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학생,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해자에게 동조하는 학생, 피해자가 될까봐 무관심한 척 하는 학생, 가해자의 행동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는 학생이 보인다. 권력관계를 그대로 놔두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상담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관계 중심으로 보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학급 내 부당한 권력관계를 평등하고 평화로운 관계로 돌려놓는 것이다. 물론 이는 쉽지 않은 일이다. 교사나 학교가 노력한다고 해도 학생들 스스로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지 않으면 헛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학생들로 하여금 겉으로 보이는 것 이면에 감춰진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는 일이고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다.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힘을 갖게 되면 그 때 관계는 달라진다.

☑ 학교폭력을 읽는 키워드, 인정욕망

인간에게는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그것으로서 자신이 가치 있는 인간임을 증명하는 것이다.¹⁶⁾ 그런데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길은 몇 가지밖에 없다는 게 문제다. 학교에서 최고로 인정해주는 가치는 높은 성적이다. 그러나 성적이 높은 학생은 소수이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생도 소수다. 성적이 높지 않은 학생이 학교에서 인정받으려면 착해야 한다. 여기서 착하다는 것은 교사에게 예의바른 것, 학교 규율을 잘 지키는 것, 학교에서 요구하는 가치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 등이다.

공식적 공간에서 인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인정받기를 포기할까? 그렇지 않다. 비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낸다. 그 같은 영역에는 운동을 잘하는 것, 게임을 잘하는 것, 싸움을 잘하는 것, 유머러스한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인정을 받고자 하는 방법이다. 공식적 공간에서 무한경쟁, 약육강식의 가치를 내재화한 학생들은 비공식적 공간에서도 폭력적인 방법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 권력을 가진 학생들이 편에서 다른 학생을 괴롭히고 자기보다 더 약한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인정을 얻는다.

그와 같은 권력관계 형성은 일부 학생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학급 학생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권력구조의 최하위에 위치하지 않기 위해서 모두가 투쟁하는 것이다. 권력구조의 최하위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 학생들은 더 센 학생들 편에서 약한 학생을 괴롭힌다.

인정욕망은 교사나 학교가 강제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인들도 자기가 맺는 관계 속에서 늘 인정받기를 원한다. 좋은 아빠, 좋은 아내,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뛰어난 업무 능력.....

¹⁶⁾ Fritz Wandel은 '주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교류분석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기 존재를 인정해주는 자극(stroke)을 원한다고 한다.

인정욕망이 강제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을까? 그렇지 않다. 인정욕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면 된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어른들의 사회가 인간이 가진 모든 재능의 가치를 같은 무게로 인정하지 않듯이 학생들의 사회 속에서도 어떤 특성은 인정받지만 어떤 특성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담임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학급 안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하는 것이다. 학교는 성적 향상, 용의복장 지도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학생자치활동,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인정욕망을 긍정적으로 발산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 문제 해결 누가 해야 하는가?

1. 학교 외부 전문기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 외부 기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와 외부기관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학교는 학생의 가정환경과 관련해서는 도움을 주기 어렵고 방과 후에 무한정으로 돌봄기능을 행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 외부 기관의 개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학교를 돕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학교 외부기관이 직접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이들은 교묘하게 학교의 무능함을 부각시킨다. “선생님들 무척 바쁘십니다. 학교폭력 문제까지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선생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외부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와 같이 말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마치 자기들이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 학교를 더욱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들은 학교에서 요청할 경우 외부 기관이 사건에 직접 개입할 수 있게 하자고 주장한다.

학교폭력의 해결이 어렵다보니 ‘학교 외부 전문가’의 개입을 환영하는 교사나 학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전문가를 자처하는 외부 세력이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설사 외부 전문가들이 뛰어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학생들과 함께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학급 내 부당한 권력관계가 평등하고 평화로운 관계로 달라지도록 지도할 수 없다. 즉,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이는 교사와 학교가 일상적인 생활지도를 통해 꾸준히 노력해야 가능한 일이다. 지역사회와 외부기관은 학교가 담당해야 할 일까지 자기들이 하겠다면서 문제해결을 어렵게 할 것이 아니라 학교가 문제 해결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단위 학교 수준에서 하기 어려운 것들, 이를테면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방과 후 돌봄기능, 학부모 상담, 경제적 지원 등에 신경 써야 하고 학교 밖에서 발견된 폭력 사건에 대해 대해서도 학교에 알리고 학교를 중심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2. 스쿨폴리스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2011년 3월 28일 수원의 창용중학교에서는 ‘스쿨폴리스(학교전담경찰) MOU 체결 및 발대식’이 열렸다. 이날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이강덕 경기경찰청장은 경기도 내 6개 지역교육청에 배치될 6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을 임명했는데 이는 전국 최초의 스쿨폴리스이다. 스쿨폴리스 제도는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

스쿨폴리스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5, 6년 전부터 있어왔고 실제로 2005년에 부산에서는 이 제도가 시범적으로 시행되기도 했다고 한다. 스쿨폴리스 제도는 무엇인지 살펴보자.

교원 및 퇴직 경찰관으로 이루어진 학교경찰을 단위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으로 선정해, 이들로 하여금 교내외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 예방 및 선도 업무를 맡게 하는 것이다.¹⁷⁾

이번 경기도에서 임명된 스쿨폴리스는 현직 경찰관이다. 이들이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인지 경기도교육청의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들 학교전담경찰관은 지역교육청 생활인권센터에 근무하면서 ▲학교폭력 예방활동 전개 ▲학교폭력 및 범죄예방교실 강사 지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여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 ▲학교폭력 사안 및 민원 해결 지원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학교 순회 순찰 및 도울 학생 선도프로그램 운영 등의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경찰관이 일선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한 것은 종종 있었던 일이다. 스쿨폴리스에게 그런 역할을 맡긴다는 것은 기존에 해왔던 예방교육을 좀 더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인력배치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경찰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경찰의 특성 때문이었지만 가해자에게 어떠한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안내하는 것이 중심이었다. 학생들은 여기에 대해 별로 귀 기울이지 않는다. 경찰은 학교폭력의 발생 매커니즘, 학급 내 권력관계의 형성과 변화, 학생들의 심리 등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학교폭력예방교육은 피상적인 수준에서 이뤄져 왔고 학생들의 관심을 끄는데 일정한 한계를 지녀왔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경찰이 참여하면 가해학생에 대한 형사적 판단을 내리는 데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한 한계를 갖고 있다.

위 보도자료 만으로는 피해자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는데 경기지방 경찰청의 2011년 2월 24일 보도자료를 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다.

10년 7월 경찰관으로 구성된 「스쿨폴리스(학교전담경찰)」 3명을 선발, 도내 3개 市교육청(수원, 용인, 남양주)에 시범적으로 배치, 비행 청소년 예방선도활동을 추진하는 가운데, 심리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현직경찰관으로 구성된 “경찰심리상담 연구모임”(회장 이원수 등 11명)과 함께 비행청소년 심리상담을 실시(매 토요일), 재비행 예방 및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활동은 소중하기는 하나 상담교사의 역할과 중복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상담교사보다 더 전문적인 상담활동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학교 순회 순찰활동의 경우 지역 교육청에 배속된 스쿨폴리스가 관내 모든 학교의 순찰을 상시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일선 학교에 배치된 배움터지킴이의

17) 스쿨폴리스제도 [school police system] | 네이버 백과사전

활동과 활동영역이 겹치기도 한다.

결국 스쿨폴리스가 하는 일은 상담교사, 배움터지킴이가 하는 일과 상당부분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스쿨폴리스 제도를 도입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혹시 학교교육에 대한 경찰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는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교육청은 겉보기에 그럴 듯한 제도를 도입하기보다 상담교사의 확대배치, 상담교사의 학교폭력 상담 역량 강화, 상담부의 역할 강화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게 아닐까?

3. 학교가 중심이 되고 국가기관, 지역사회 등이 협력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학교폭력 해결의 중심은 학교가 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맺는 관계가 평화로워야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담임교사는 학급운영 과정을 통해 일상적인 예방활동을 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적절하게 개입할 수 있어야 하고 학급 구성원 모두가 해결의 주체가 되게 해야 한다.

학교는 협력적 문제 해결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어떤 학교는 문제 해결과정에서 담임교사를 배제하며 어떤 학교는 담임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미룬다. 두 경우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담임교사, 생활지도부, 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관리자가 협력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국가는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여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경찰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을 여성청소년계에서 담당하게 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가피해학생이 여성문제의 가피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조사받는 상황이 과연 적절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경찰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부모가 합의하도록 유도하고 그것이 안 되면 가해사실을 밝혀내어 처벌하는 게 관심을 기울인다. 그러나 부모 간의 합의는 법적 분쟁을 잠재울 수 있을 뿐 학생들의 관계 변화를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경찰은 부모 간의 합의만 유도할 것이 아니라 가피해학생을 조사함에 있어서 학교의 도움을 받아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는 가정이 돌보지 못하는 학생을 돌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육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사회봉사나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은 학생을 지역사회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관 자체가 많지 않아 대기 기간이 길고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질이 낮을 때엔 역효과가 나기도 한다.

□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대안

1.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헌장 제정 및 평화교육법 제정

앞서 말했듯이 학교폭력의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폭력 문제만 보아서는 안 된다. 학생의 왜곡된 인정욕망이 다른 학생을 공격하면 학교폭력이 되는 것이고 교사를 공격하면 수업 방해 행동이 된다. 자기 자신을 공격하면 우울증이 된다. 인정욕망의 좌절은 무기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학교폭력의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 평화, 인권, 문화의 가치를 교육의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부수적으로 여겨졌던 생활지도를 ‘생활교육’으로 격상시키고 공식적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야 한다.

현장을 제정하는 것은 국가, 교육청,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 사회단체, 지자체 등 교육과 관계된 모두가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운동을 벌이는 것이다. 법을 제정하는 것은 평화교육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현장 제정과정이 법 제정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법 제정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평화교육법은 교사, 학생,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화하고 학교, 교육청,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명시하여 교실에 평화, 인권, 문화가 꽃피게 할 것이다.

2. 법률 개정

당장 평화교육법을 만들기 어렵다면 현행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라도 개정해야 한다.

☑ 학교폭력에 대해 새롭게 정의

현행법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¹⁸⁾

엄밀하게 말하면 이는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라기보다는 학교폭력에 포함되는 행위를 나열한 것이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따돌림을 제외하고는 모두 형법에서 말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따돌림의 경우에도 어떤 것을 따돌림이라고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법이 학교폭력에 대해 규정력을 갖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학교폭력은 새로운 형태로 변화한다. 그 때마다 법률을 개정할 수는 없으므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학생들이 학교를 매개로 해서 맺은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라고 정의 내리고 그 시행령에 구체적인 학교폭력의 형태를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¹⁹⁾

☑ 교과부와 교육청, 학교, 교사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

교과부와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장 단기적 계획을 세워야 하고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물리적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물리적 조건을 만드는 것은 교육과정 개편, 교과부와 교육청과 학교의 부서체계 개편, 예산 확보 등이 포함된다. 연구활동 지원 및 양질의 연수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교육자료 제작, 평화인권센터 설립, 연구학교 지정 등도 교과부나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교육청은 지역적으로 나타나는 폭력 문제, 소위 일진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현행법을 통해서도 이 문제를 다루기가 어렵다. 문제가 발생하면 각 학교는 자기 학교 학생에 대해서

18)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19) 참고자료로 실은 김경옥의 <학교폭력의 재개념화>, <학교폭력 유형 분류의 중요성>을 참고할 것.

만 조치하고 그나마도 자기 학교에 해당학생으로 인해 피해 입은 학생이 없을 경우엔 유야무야 넘어가기도 한다. 중학생에 의한 폭력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초등학교가 종종 있지만 중학교에서 가해학생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조치를 취했음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문제에 대해 교육청이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학교(교장)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에 평화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담임교사에게 책임을 집중시키거나 생활지도부에 모든 것을 맡기는 식이어서는 안 되며 전담기구²⁰⁾를 중심으로 담임교사, 상담부, 생활지도부, 보건교사가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담기구에는 문제가 발생한 학급의 담임교사가 구성원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전담기구는 사건에 대해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학교장은 보고내용을 바탕으로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 담임교사 차원의 지도로 마무리 지을 수도 있고 선도위원회를 통한 처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한 조치를 결정할 수도 있다. 학교장은 학부모의 부당한 인권침해로부터 담임교사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상담부는 가해학생의 심리적 문제와 피해학생의 심리적 피해 정도를 파악해야 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담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을 해야 하며 필요 시 외부 전문 상담기관과 학생, 학부모를 연결시켜 주어야 한다.

교과담임교사는 문제 발생을 인지하는 즉시 가해행동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하며 학교폭력 책임교사와 담임교사에게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담임교사는 일상적인 학급운영을 통해 평화로운 학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가해학생, 피해학생, 주변 학생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조사 결과는 전담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해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부과할 수 있다. 담임교사와 전담기구는 학부모에게 내교를 요구할 수 있고 학부모 면담권을 갖는다.

☑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강제

적극적인 예방활동이 이뤄지게 하려면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법률은 예산과 시간의 확보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 예방교육은 학급활동을 통한 일상적인 예방교육과 계기적 예방교육으로 나뉜다. 학급활동을 통한 일상적 예방교육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담임교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계기적 예방교육은 정기적인 ‘학교평화 교육의 날(가칭)’ 운영을 통해서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다. 계기적 예방교육에는 학교폭력 감수성 교육(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에 공감하기), 학교폭력 정의하기, 법률 교육, 의사소통 교

²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14조 3항에서는 학교장에게 전담기구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 “학교의 장은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현행 법률은 전담기구에 담임교사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지만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가 포함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육(평화로운 갈등 해결을 위한 교육), 집단상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협력적 해결 시스템 구축

학교별로 그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시스템을 조금씩 다르게 만들 수도 있을 텐데 대개 이런 체계를 갖추면 될 것이다.

처리과정	담당자	비고
폭력 사건 발생 인지	사건 발생을 인지한 교사	사건 발생을 인지한 교사는 상황을 중단시키고 담임교사와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알림
피해학생 조사	담임교사(1차 조사) 상담교사(2차 조사)	담임교사는 피해학생을 안심시켜 솔직하게 말할 수 있게 함 상담교사의 조사 과정은 그 자체로 치유과정이 될 수 있음. 상담교사는 피해학생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심리적 피해 정도, 과거의 피해사실 여부를 파악
처리방향 협의	학교폭력 전담기구 (담임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상황이 심각한 경우 임시로 학급을 교체. 학급 교체 시 원칙은 가해학생을 다른 학급에 배치하는 것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서 피해학생을 다른 학급에 배치할 수도 있음. ²¹⁾ 이후 조사 과정에 있어서 전담기구 소속 교사 각각의 역할을 정함.
주변학생 조사	담임교사 (또는 책임교사)	설문조사, 면담 등의 방법 활용
객관적 입증자료수집	담임교사 (또는 책임교사)	증거자료(증거물, 설문조사, 면담 자료 등)
가해학생 조사	담임교사 (또는 책임교사)	가해사실 인정받기, 보복 행위 금지
피해학생, 가해학생 심층 상담	상담교사	가해자와 피해자 확정, 심리상태 확인
가해학생 부모상담	담임교사 (책임교사지원)	공감해주기,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설명.
피해학생 부모상담	담임교사 (책임교사지원)	안심시키기, 사실 설명, 그동안 이상한 점은 없었는지 묻기, 바라는 점 파악하기
처리 방향 심의	학교폭력 전담기구 (담임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여부, 가해자 선도/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학급지도 프로그램
처리 방향 결정	학교장	학교장은 전담기구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처리방향을 결정. ① 담임교사의 지도 및 상담부과 ② 선도위원회를 통한 조치 ③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한 조치 ²²⁾
① 담임교사의 지도 및 상담부과	담임교사 (책임교사, 상담교사 지원)	가해학생의 반성을 유도하고 피해학생에게 사과하게 함.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보복을 방지.
② 선도위원회를 통한 조치	선도위원회	사회봉사 이하의 선도 조치
③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한 조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특별교육이수 이상의 조치
학급 학생 전체를 지도	담임교사	학급 구성원 모두가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게 함 동조자, 방관자의 반성 유도, 피해학생의 장점이 인정받을 수 있는 학급 분위기 조성

협력적 해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학교를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생활지도부 체계나 상담부 체계에서는 협력적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생활지도부는 억압과 통제 중심의 학생 선도를 주로 담당해왔다 앞으로는 학생인권, 학생자치활동, 학교폭력, 선도를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것과 함께 복지의 기능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생활지도, 선도활동을 하다보면 복지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생활지도부는 복지가 필요한 학생들과 외부 기관을 적절히 연결해 줄 수 있어야 하고 외부기관은 학생의 상황에 대해 학교와 소통해야 한다.

상담의 역할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교과부나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상담교사의 확대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도 많고 상담교사가 있는 학교의 경우에도 상담 교사 1인이 전교생을 상담하기에 역부족일 때가 많다. 교과 담당 교사 중 상담연수를 받았거나 자격증을 가진 교사를 우선적으로 상담부에 배치하고 상담교사와 역할을 나누어야 한다. 중등의 경우 학년별로 1인씩 상담교사를 배치하면 좋을 것이다. 상담부에 배치된 교과 담당 교사는 비담임으로 하고 수업시수를 줄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내실 있는 상담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생활지도에 대한 관리자의 책무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앞으로 통제와 억압 중심의 지도방식이 점차 사라지면서 생활지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프로그램 마련, 담당자 배치, 예산 확보 등이 학교 차원에서 비중 있게 이뤄지려면 관리자가 이에 대해 책임지고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4. 생활지도 시간을 수업시수로 인정

생활지도를 위해 투입하는 시간을 수업시수로 인정해야 담임교사가 교과 수업 부담을 덜고 생활 지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매일하는 조회, 종례, 상담활동, 학급자치활동, 그 외 담임 업무 등을 수업시수로 인정한다면 주당 4시간은 족히 될 것이다.

생활지도를 위해 투입하는 시간을 수업시수로 인정하는 것은 생활교육(생활지도)을 공식적 교육 과정으로 만드는 것이다. 학교에서 생활지도가 늘 강조되면서도 통제와 억압의 생활지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과교육(입시교육)이 중심이 되는 교육과정 때문이다. 생활지도는 교과교육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공부에 집중시키기 위해 두발 규제가 있어왔고 용의복장 규제가 있어왔다. 그러나 이제 학교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학교폭력의 심화, 생활지도의 어려움 증가는 학교교육의 역할이 무엇인지 묻고 있다. 생활지도 시간을 수업시수로 인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생활교육의 공식적 교육과정화를 확대해야 한다.

5. 평화인권교육센터 설립 - 교육청의 상담 및 교육기능 강화

21) 현행 법률에서는 학교장에게 긴급조치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가능한 긴급조치는 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②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③ 학교에서의 봉사 이다. 학급교체도 긴급조치에 포함시켜야 한다. 가해학생은 다른 학급에 배치되는 것만으로도 위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복을 막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22) 교과부에서 2009년 4월에 발간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77쪽에서는 학교장이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거나 선도위원회를 통한 조치를 명하거나 교사에게 지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는 괜찮은 방법이기도 하나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 특히 현행 법률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 수준의 지도나 선도위원회를 통한 조치는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법률에 전담기구와 학교장의 권한을 명시하고 교사의 지도나 선도위원회를 통한 조치도 가능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각 시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 평화인권교육센터를 만들어 교육청의 상담 및 교육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평화인권교육센터는 아래와 같은 일을 해야 한다.

- 학부모 지원 : 학부모 상담, 단위 학교에서 학부모 교육 실시
- 교사 지원 : 교사 상담, 교사 연수(학교 연수, 교육청 직무 연수 등)
- 학생 지원 : 학생 상담, 학교폭력 예방 교육,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치유 프로그램 운영
- 홈페이지 운영 : 교사, 학생, 학부모가 자기 경험을 공유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사 공동 실천 운동 전개²³⁾

정책적 대안은 위로부터 만들어져 학교현장에 적용되는 경로를 따른다. 시일이 오래 걸리고 정치적 변수에 따라 부침을 겪는다. 교사 공동 실천 운동은 아래로부터의 운동이고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이며 근본적인 변화를 일구는 운동이다. 교사 공동 실천을 통해 정책적 대안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교사 공동 실천 운동은 전교조 등 교직단체가 주도해야 할 것이다.

교사 공동 실천의 핵심은 학급에서의 실천이다. 학생들 간의 불평등한 관계 형성을 막고 학급의 평화를 지향한다. 학급 학생 전체를 문제 해결의 주체로 세운다. 공동 실천의 기본틀은 아래와 같다.

1. **학급의 목표 공유하기** : 목표 공유하기 활동의 결과로 <학급 평화 규칙>을 제정.
2. **평화를 위한 의사소통 구조 만들기** : 학급 회장 선거, 친교 위원 선발 및 솔루션위원회 구성, 아침 나누기(조회), 하루 마무리하기(종례), 모둠(두레) 조직 등
3. **평화로운 관계 맺기 활동** : 과거 청산을 위한 상담활동, 친해지기 위한 프로그램,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계기교육, 단합대회 등
4. **역할 갖기(영향력 나누기)** : 자기가 잘 하거나 좋아하는 것으로 학급에 기여하기, 1인 1역할 등에 대한 재조명
5. **평화도 점검하기** : 설문조사, 토론, 학급신문, 친교 위원의 활동
6. **갈등과 폭력 해결하기** : 솔루션 위원회, 학급회의
7. **학년말 마무리 활동을 통한 비약적 성장** : 이별식(학급 마무리 잔치), 학급 문집

공동실천 매뉴얼 또는 워크북이 보급되어야 하고 실천사례를 나누고 새로운 과제를 도출하는 대회가 개최되어야 한다.

학교나 지역단위로 교사들의 연구모임이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개별적 실천은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아무리 좋은 매뉴얼도 학교상황, 지역상황, 교사의 성향에 따라 별 의미 없는 것일 수 있다.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새로운 사례를 창조할 수 있으려면 서로 의지하고 함께 연구할 수 있는 모임이 필요하다.

²³⁾ 구체적인 실천내용에 대해서는 참고자료로 수록한 『365일 평화로운 교실 만들기』(곽은주)와 『따돌림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급만들기』(학생생활연구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를 참고할 것.

Memo



토론 1 “학교폭력, 경쟁교육이 나은 기형아”

고 유 경(참교육을전국학부모회 상담실 상담국장)²⁴⁾

요즘 언론에서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기사는 단연 학교폭력에 관한 기사이다. 대구 중학생 자살의 원인이 된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면서 사회는 커다란 충격에 빠진 듯하다. 그 방법과 강도가 상식을 뛰어넘기 때문이다. 심한 표현이지만 우리 사회는 누군가 목숨을 잃어야 움직이는 잔인한 사회이다. 그것도 잠깐 부르르 끓다 미는 경우가 많다. 학부모상담실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상담이 항상 들어오고 우리 상담원들은 항상 놀라고 마음 아파한다. 그리고 분노한다. 이렇게 동료학생에게 잔인한 폭력을 저지른 가해학생에게 분노하고, 그들의 잘못을 축소하고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듯이 나오는 뻔뻔한 가해학생의 부모에게 분노하고, 조용히 덮고 싶어 하고 양자 간에 해결하기를 바라며 방관하는 학교에 분노하고, 성의 없거나 능력이 없는 교사에게 분노한다. 그리고는 되묻는다. 도대체 왜들 그럴까? 왜 아이들 사이에 이런 잔인함이 생겨날까? 그 아이들은 선의가 없을까?

언론에서, 정부에서 저마다의 진단과 처방을 내 놓는다. 그러나 그 시각은 매우 좁고 처방은 땀질식 단기처방인 경우가 많다. 최근 교육당국이 급히 조직한 ‘학교폭력근절대책 자문위원회’에서 내놓은 대책들을 봐도 그렇다. 교육당국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이라는 초강수를 빼들었다.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현행보다 2살 낮춰 만 12세로 규정하는 데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폭력 전력과 징계내역을 기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나아가 현재 강제 퇴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과정의 중학생을 퇴학 또는 강제 전학시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정부 대책이 지나치게 징계위주로만 편향돼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아 논란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보다 근본적인 진단과 대책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의 원인을 진단하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교육의 문제와 폭력을 용인하는 사회구조, 꿈을 잃어버린 학생과 교사의 자괴감, 공부 못하면 문제아가 되는 교실, 생활지도 보다는 점수 올리는 것이 더 중요한 교사, 등 각자의 입장에서 원인도 다양하다. 그것을 종합해 보면 결국 ‘과도한 입시경쟁’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공부만 잘하면 집에서나 학교에서 모든 것이 용인되는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다.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인성교육 보다 치열한 대입시에서 살아남기 위한 ‘정글법칙’ 훈련만 받은 결과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으로 ‘뽕뽕이’ 도는 사회구조를 하루빨리 해체하고 그 자리에 기본적인 민주시민의식을 배우는 인권교육이 들어서야 한다.

24) 서울북부교육희망네트워크 회원

MB정부가 내놓는 교육 정책의 성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경쟁”이다. 지난 4년간 추진해온 모든 정책은 모두 ‘경쟁’으로 모아지고 있다. 고교다양화, 일제고사, 국영수 비중을 높이고 결국 수업량을 늘리게 되는 집중이수제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오로지 입시를 위한 공부만을 강요받도록 하고 있다. 학교는 더 이상 전인교육을 할 만큼 한가한 곳이 아니다. 학생들은 더 이상 동질그룹이 아니다. 노는 애, 평범한 애, 공부만 하는 애, 찌따... 이렇게 구분하고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잔인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교육이 서로를 바라보고 상대방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는 것이다. 힘과 질서에 복종하고 소수자와 약자를 배제하고 다름을 거부하도록 한다.

교육의 목표가 대학입시에 맞춰진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해야 할 때다. 그동안 너무 당연해서 건드리지 못하던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다시 끼워야한다. 학생인권조례도 이런 근본적인 고민을 답아야한다. 치열한 경쟁을 하며 서로의 인권을 살피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쟁터와 같은 우리 아이들의 학교에 진정한 평화가 머물기를 간절히 바란다.

Memo



토론 2 “학교폭력 사례 분석과 사회적 성찰, 대안을 위한 시론”

문 재 현(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소장)

학교폭력이 학교 담장을 넘어 전사회적 문제가 된지 오래 되었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학교폭력의 양상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원인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것이 거의 모든 행위주체들이 사실상 잘 모르거나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해자와 그 부모들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피해자는 자신을 방어하기 바쁘거나 방어행위 자체를 비난받고 있으며 학교는 폭력의 실상을 숨기기 급급하고, 언론은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만 다룰 뿐 사건의 본질을 파헤치거나 근본적인 대책에는 관심이 없다. 또한 정부는 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현장과는 거리가 먼 피상적인 대책만 내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답답한 상황은 우리의 문화 전통 즉, 사회적 삶을 형성하는 의미지층 안에 학교폭력, 아동 인권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개념과 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조적인 실천 활동이 미약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학교폭력은 얽힌 실타래와 같다. 순리적으로 풀어야 할 실타래를 성급하게 잡아당기면 복잡하게 엉켜서 어디로부터 풀어야 할 지 난감하게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집단괴롭힘은 그 원인부터 다양하다. 가정환경이 원인일 수도 있고, 학교에서의 경험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사회 전체의 위계적인 문화가 학교에 끼치는 영향도 분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모여서 원칙과 목표를 공유하고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모두가 문제를 함께 일으켰으니 푸는 것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이다.

가해학생을 깨닫게 하고, 피해자를 돕고, 방관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인 참여자로 나서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행동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실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를 바탕으로 한 진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만드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파악일 것이다. 최근 연이어 일어나는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사건 등을 통해 그 양상과 문제해결의 방향을 찾아보기로 하자.

1. 무엇이 문제인가? - 사례를 통해 본 집단괴롭힘(일진) 실상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 2011. 12. 20.

1) 개 요

- 가해학생 B,C군 등은 대구 중학생 2학년 A군에게 게임을 레벨업 시키고 캐릭터를 키우기 위한 아이템 구입을 위해 컴퓨터를 강제로 시키고 지속적으로 돈을 빼앗음
 - 이를 위해 책을 뺏거나 숙제를 시키는 것은 기본이고, 지속적으로 괴롭힘
- 휴대폰 문자로 일거수 일투족 감시
 - “니 내일 죽인다. 내가 시킨 거 안 하면 내일 짹소리 말고 맞아라”
 - “똥파리만도 못한 X. 니 내일부터 애들한테 똥파리라고 불리게 될 거다 ㅋㅋㅋ”
- B군과 C군은 사전에 괴롭히는 방법 등 모의
 - “니 내일 물 좀 쓰라(물고문하자). 물에 계속 쳐 넣자”
- 물고문과 불고문을 하고, 전기줄로 목을 감은 뒤 바닥에 떨어진 과자부스러기를 먹도록 가혹행위와 학대를 지속
- 자살하기 이틀 전에는 ‘니 내일 죽인다’는 문자도 보냄
- 가해학생의 보복이 너무 두렵다고 유서를 남기고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

2) 행위 주체들의 대응 태도

○ 교사와 학교 대응

- 담임선생이 괴롭힘 징후 발견
 - A군이 점심시간에 혼자 교실에 남아서 우는 모습
- 초기에 가해 아이들은 평범한 아이들이라고 주장
- 사건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학교폭력대책위를 열어서 가해 학생들에게 10일간 출석정지 조치
- 지금은 학교분위기를 안정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입장
- 사건 후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검사, 심리치료

○ 학우들

- 친구들 대다수는 괴롭힘을 방관 또는 동조했던 것으로 판단
- 친구 2명은 도우려고 함. 선생님에게 알리려고 했으나 보복을 두려워하는 A군이 말려서 돕지 못함.

○ 교육청

- 우동기 교육감 유족과 시민들에게 드리는 사과 발표
 - 일제고사나 월말고사 등 기초학력강화라는 이름하에 진행되는 경쟁위주 정책에 대한 반성

이 전혀 없음

- 일진에 대한 인식이나 대책 부재

○ 경찰

- 유서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수사 착수

○ 부모

- 집단괴롭힘의 징후가 있었으나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
- 아이의 몸에 멍자국이 있다.
- 계속 돈을 달라고 한다.
- 비싼 옷을 사달라고 조르고 그 옷을 잃어버리고 온다.
- 사건 후 가해아이들에 대해 법대로 처리, 가해부모와 학교에 손해배상 청구

○ 비교

- 유서를 통해 실상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슈화 된 것
- 행위의 잔인함이나 지속성으로 볼 때 일진아이들일 가능성이 높음.
- “ 똥파리만도 못한 X. 니 내일부터 애들한테 똥파리라고 불리게 될 거다 ㅋㅋㅋ”

【대구 여중학생 자살 사건】 - 2011. 7.

1) 사건 개요

- 같은 반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학생을 돕기 위해 A양이 학우 12명을 대표해서 담임에게 편지를 보내 도움 요청
- 편지를 본 담임교사는 진상을 알아보지도 않고, 반 전체학생들을 책상위에 무릎 꿇게 하는 집단체벌을 함. 이 경우 피해자는 아주 억울한 심정을 가지게 됨.
- 이로 인해 반장을 비롯한 왕따 주도 학생들(일진일 가능성이 높음)에게 낙인찍혀 집단괴롭힘을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

2) 행위주체들의 대응 태도

○ 교사 및 학교의 대응

- 가해, 피해자가 없고, 애들을 가해자로 몰았다면 엄청나게 반발했을 것이라는 입장

○ 학우들

- 집단괴롭힘에 대응하려고 하는 용감한 학생들이 있었음
- 그러나 학교와 교사들의 잘못된 대응으로 침묵을 선택

○ 경찰

-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 증거가 없으면 우리가 수사를 못하겠다는 반응. 12월의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처럼 휴대폰 문자 메일을 확인했으면 어떠했을까.

- A양이 남긴 글이 구체적이지 않고, 집단 괴롭힘에 대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

○ 부모

- 부모는 징후를 인지하지 못함
- A양의 옷에서 발견된 '날(나를) 해친 아이들'과 '날 구하려했던 아이들'이라는 메모를 토대로 진상규명을 요구

○ 비교

- 역시 행위의 집단성으로 볼 때 일진아이들의 집단괴롭힘 사건으로 보임
- 일진아이들에게 대응을 한다는 것은 학교나 부모 등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아이들만 그 보복에 의해서 힘들게 된다는 학습효과
- 같은 학교 남학생 역시 괴롭힘에 순응하고 저항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 높음

【대전 여고생 자살 사건】 - 2011. 12. 2.

1) 사건 개요

- 대전 모 여고 1학년 S양은 주변의 반 학생 중 한명과 마찰이 일어났고, 그 학생으로 인해 같은 학교 일진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함
- 자살 당일 S양은 담임교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으나 담임교사가 ‘이건 친구들끼리 문제니까 내가 개입할 일이 아닌 것 같다. 너희끼리 해결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문제해결의 책임을 S양에게 떠넘김
- 교무실에 간 사실이 퍼지게 되자 일진들은 S양과 친구까지 불러서 집단 폭행
- 괴로움을 호소하는 S양에게 가해학생들은 ‘너 죽어’라고 하고, S양이 ‘그래 그럼 내가 죽어 줄게. 됐니?’하고 반문하자 ‘너 까짓 게 죽을 수 있거나 하니?’하고 비웃음
- S양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 유서를 남기지 않음

2) 행위주체들의 대응태도

○ 교사 및 학교의 대응

- ‘가장 좋은 방법은 친구끼리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사가 몸이 좋지 않아 다음 날 면담하기로 약속했다는 입장
- S양을 괴롭힌 학생들도 일진 등이 아닌 평범한 학생들이라고 함
- 죽은 S양이 집단괴롭힘을 당할 때 학생 14명이 둘러싼 것은 맞지만 단순한 말싸움이었고, 담임교사가 몸이 아파 조퇴하는 바람에 상담을 해주지 못했다는 입장
- 사건의 축소 은폐 시도
 - 1차 조사 후 가해학생 8명이 쓴 “S양이 이기적이고 소유욕이 강했다”라는 진술서를 보여

증

- 부모가 S양이 인터넷 미니홈페이지와 SNS(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 남겨 놓은 글을 보여 주자 그제서야 다시 조사
- 담임교사는 S양의 도움 요청에 ‘가장 좋은 방법은 친구끼리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S양과 다툼 학생들도 일진 등이 아닌 평범한 학생들이라고 함
- 학교폭력대책위도 열지 않고 생활교육부장에게 모든 것을 맡겨 놓음
- 교장은 심근 경색으로 입원, S양과 친했던 4명도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

○ 가해 학생

-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은 없고 인터넷에 개인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퍼 나른 누리꾼을 처벌해 달라며 둔산경찰서에 별도의 진정서 제출

○ 교육청

- 교육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 없고 지역사회의 비판여론

○ 경찰

- 사망 자체에 타살 혐의점은 없다는 입장
- 사망에 대한 인과 관계에 대한 문제는 다른 사안인 만큼 관련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

○ 부모

- 친척이 인터넷을 통해 S양의 억울한 사연을 올림
- 학교의 사건 은폐시도에 다시 수사해달라는 진정서 제출

○ 비교

- 일진들에 의한 왕따 사건

【인천 여중생 각목 폭행 사건】 - 2011. 12. 27

1) 사건 개요

- 인천 모 중학교 2학년 A양은 이른바 같은 학교 ‘일진’아이의 이름과 사진을 도용해 8개월 동안 채팅을 했다는 이유로 같은 학교와 인근 학교 남녀 동급생 15명으로부터 각목과 주먹으로 폭행당함
- 일부 학생은 A양의 교복 치마를 찢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심지어 담뱃불로 다리와 손등을 지지기까지 했음.
- A양은 입학 직후부터 가해학생들에게 돈을 뺏기고 쉬는 시간에 학교 밖으로 나가 떡볶이 심부름을 하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털어놓음.
- A양을 괴롭힌 B양 등은 평소에도 동급생들에게 ‘돈을 거뒀오라’고 시키는 등 자주 괴롭혀 학생들 사이에 공포의 대상
- A양은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

2) 행위주체들의 대응태도

○ 학교

- 학교는 A양에 대한 폭행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가해학생에 대한 어떤 징계조치도 취하지 않음
- 일진에 의한 집단폭행 사건을 학생들 간의 화해로 무마하려는 입장
 - 10월에도 중3 여학생이 동급생 10여 명에게 집단 폭행당해 학부모가 가해 학생들을 형사고발했다가 나중에 취하
 - 아이들끼리 화해해서 징계수위 조절하고 있다는 입장

○ 교육청

- 사건 후 무반응으로 대응하다 언론에 보도되자 진상 조사 착수

○ 부모

- 인천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서 성토히는 글 올림
 - “대구에서는 학생이 죽어나가니까 교장이 짤린거고, 000에서는 애가 안죽었으니까, 이런 큰 사건을 덮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 가해학생들에 대한 엄벌 요구

○ 비교

- 학교를 넘어선 학교지역 연계형 일진들이 한 아이를 집단으로 괴롭히는 일명 다굴 사건
- 일진아이들이 일탈행위를 하는 곳이 방과 후 초등학교나 주변 아파트의 놀이터라는 점에서 지역공동체의 대응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

【청주 기계공고 학생 자살 사건】 - 2011. 3. 9

1) 사건 개요

- 3월 초 이군은 휴대폰을 빌려 쓴 친구가 휴대폰 메모리칩(유심칩)을 빼고 건 낸 사실을 뒤늦게 알고 되돌려 받으려 했으나 돌려주지 않자 담임교사에게 상담 신청을 했음.
 - * 유심칩은 휴대폰의 핵심 부품으로 유심칩이 없으면 휴대폰은 무용지물이 되고, 요금을 지불해야 됨은 물론 개인정보까지 공개될 위험이 있음
- 담임교사는 ‘수업 없을 때 찾아 줄테니 걱정하지 말라’하고 이군을 돌려보냄
- 마지막으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핸드폰을 빼앗아 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담임선생님과 학생과를 찾아가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타이름
- 이군은 바로 교실로 가지 않고 학교 실습실 옥상으로 올라가 ‘이런 세상에는 살기 싫습니다. 다음 생애에는 평화롭게’라는 글을 왼손에 쓰고 투신

2) 행위주체들의 대응태도

○ 교사 및 학교의 대응

- 신규라 경험이 없는 담임교사는 수업이 끝나고 상담해도 늦지 않는다고 판단함
- 사건 발생 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학생과 교사들에게도 외부에 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은폐시도
- 사건 후 자살방지 교육을 실시

○ 학우들

- 단순히 유심칩 하나 뺏기는 것으로 자살하지 않고, 한번 따돌림 대상이 되면 학교 졸업할 때까지 괴롭힘의 대상이 된다고 증언하여 피해자가 왕따임을 암시. 또 “친구를 도와주고 싶어도 바보로 취급받기에 친구를 해줄 수 없고, 학생과에 도움을 받는다 해도 다시 보복에 시달린다.” 는 증언도 있었음

○ 교육청

- 단위학교의 개별 사건으로 처리하고 반응하지 않음
- 교육감 차원의 어떤 사과도 없고, 현장 방문도 없었음
- 충격을 입은 학교안정화가 최우선이라는 입장
- 사건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는 자살방지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

○ 경찰

- 같은 반과 1학년 때 친구 및 담임 조사 결과 집단괴롭힘 여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
- 자살의 원인을 신체적인 약점(사시), 피해의식, 손해보기 싫어하는 성격으로 돌려 피해자에 대해 인격적 모독을 함
- 휴대폰에서 유심을 빼앗고 돌려주지 않는 것은 강도행위이고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범죄인데도 사소한 일로 처리하여 범죄를 아이들 간의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로 바꾸는 마법을 보여줌

○ 부모

- 죽은 원인이나 알았으면 좋겠다는 입장

○ 비교

- 불안과 충동 심리로 자살충동을 가진 청소년이 많은데도 학생의 긴급요청에 대처매뉴얼이 없음이 확인된 사건
- 긴급요청이 있을 때 그 아이의 요구에 바로 반응해 주어야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 공동의 원칙을 가진 다른 교사, 교장, 학부모가 그 아이를 잡고 있어야 함.

【청주 성화중 타살사건】 - 2011. 12. 19

1) 사건 개요

- 중학교 1학년 A군은 강당에서 놀다가 일진아이의 발에 걸려 넘어졌고, 일진아이는 단순히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수차례 명치를 발로 밟아 그 자리에서 사망

2) 행위주체들의 대응태도

○ 교사 및 학교의 대응

- 초기에 놀이하던 과정에 넘어지면서 복부에 충격을 받아 사망한 것이라는 입장
- 조회시간에 외부로 알리지 말라고 조직적 은폐 시도

○ 학우들

- 참고인 조사를 받은 7명의 학생들 '모르겠다, 보지 못했다.'고 진술
- 몇 몇 아이들이 SNS 통해 실상을 알리기 시작

○ 교육청

- 피해 학생이 놀이 중 우연히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
- 교육청과 일부학교에 질식놀이를 하다가 그랬다는 소문 퍼짐
- 교육감의 어떠한 언급도 사과도 없었음

○ 경찰

- A군에 대한 부검 의뢰
- 심장에 충격이 간 것 같다는 부검. 구두 진단을 토대로 가해 학생 소년부에 송치

○ 부모

- 부모의 입장을 확인할 수 없음. 단순사건으로 처리됨으로서 항변할 수 없거나 자포자기하는 상황으로 보임. 이 자체가 거대한 구조적 폭력임

○ 비교

- 일진아이에 의한 타살 사건인데도 지역 언론은 경찰의 소식을 단신으로 다루고 있음. 사회단체들도 우리 연구소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반응이 없음. 지역사회의 총체적 방관을 보여주는 사건
- 자살 사건보다도 더 직접적인 행위로 인한 타살 사건임에도 사건 자체가 부각되지 않는 것이 문제.
- 그러한 심각한 폭력이 가해지고 있는데도 아이들이 도와주지 못했다는 것은 가해 학생이 학생들 위계 서열의 상위에 있는 일진 학생일 가능성이 많음

【광주 중학생 자살 사건】 - 2011. 12. 29

1) 사건 개요

- 광주 중학교 A군은 1학기 말부터 옆 반 B군이 찾아와 돈을 빼앗고 담배를 요구하고, 무차별 폭행을 당함
- A군이 다니던 중학교 2학년 9개 반에서 한 반에 2~5명씩 폭력에 노출됐던 것으로 전해

졌다. B군과 3학년 일진선배 2명은 학생들에게 담배를 구해오라고 ‘앵벌이’를 강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한 개비당 500원씩 갈취

- 자살했던 오전에 일진으로 행동해온 B군한테 폭행을 당했고, 2교시가 끝난 뒤 다른 반 아이가 와서 숨진 A군을 교실 뒤쪽으로 끌고 가 세워놓은 채 권투영화처럼 샌드백 치듯 폭행
- A군은 다른 괴롭힘 대상이던 반 친구에게 ‘아빠 담배라도 좀 가져와 달라’고 요청했다가 학교에서 발각되어, 교무실에서 벌을 받고 이튿날 아파트 옥상 계단에 목을 매 숨짐

2) 행위주체들의 대응태도

○ 교사 및 학교의 대응

- 초기 성적 비관에 의한 자살이라고 몰아감
- 학교폭력과 관련된 자살이라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 장례식장에서 동료 학생들의 입막음 시도
- B군은 상습적인 학교폭력 행위자로 여러 번 적발했으나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 미흡
- 담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일진이거나 일진에게 담배를 조달하는 아이일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이런 징후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함.

○ 학우

- 일진에 대한 두려움으로 학우들은 도움을 주지 못하고 방관함
- 사건이후 학교의 은폐시도에 대해 불만 표시하고 부모에게 A군이 괴롭힘 당한 사실을 이야기함

○ 가해학생

- 장난으로 그랬다는 변명

○ 교육청

- 자살의 원인을 성적등 신상 문제, 교사의 가혹행위, 학교폭력의 희생 등 세 갈래로 조사하겠다는 입장

○ 경찰

- 사건 초기 성적비관에 의한 자살로 인식
- A군이 당한 괴롭힘도 경미한 행위로 간주
“B군이 A군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거나 간혹 2~3천원을 빼앗았을 뿐 정신적인 고통이나 괴롭힘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통상적인 수준의 행위’”
- 뒤에 학교폭력에 폭행사실 인정, 타살여부 수사 확대

○ 부모

- 괴롭힘 징후 발견했으나 역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함
- A군이 최근 교복 바지가 찢겨질 정도로 무릎을 다칩

- 학교와 경찰이 성적비관에 의한 자살로 몰고 가 억울함 호소
- 학교폭력에 의한 폭행과 타살에 대한 수사 요구

○ 비교

- 선후배 위계형의 일진에 의한 폭력 사건

2. 잇따른 자살사건으로부터 우리사회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마그마는 땅 속 깊은 곳에 늘 그렇게 존재하지만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잘 모르고 지낸다. 그러다가 화산이 터져 마그마가 용암으로 분출이 되어야 땅속에 그렇게 뜨거운 물질이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낀다.

일진아이들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학교폭력문제가 그렇다. 아이들에게는 왕따, 셔틀, 욕설과 조롱 등의 집단괴롭힘은 일상적인 삶속에서 항상 부딪히는 현실의 문제이다. 하지만 어른들은 평상시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다가 아이들이 심한 폭력으로 사망하거나 자살에 이른 정도의 심각한 사건이 발생해야 언론이 호들갑을 떠난다.

현재 여기저기서 설익은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사회 문화현상과 깊이 결부된 것이기 때문에 전체 사회의 성찰이 없이는 그 어떤 대안도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이 사건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1) 아이들은 죽을 만큼 괴롭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살하거나 자살하고 싶을 만큼 괴롭다는 것이다. 2010년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피해 경험이라고 밝히는 아이들이 20~25% 정도로 140~180만 명이다. 그 아이들 중 14%라고 하면 적어도 20~25만 명의 아이들이 자살 충동을 경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자살에 직면한 아이들의 상황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처할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와 교육당국의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2) 아이들 목소리(증언)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학교폭력의 실상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아이들 특히 피해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 느낌이나 생각, 자기 처지, 자기 자신의 요구를 글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며 자기 목소리를 드러내는 것조차 힘들어한다. 일진아이들이 두려워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조차 알지 못하고 일진아이들이 주입한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려면 피해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아주 작은 목소리 또는 침묵의 목소리에도 민

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어른들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아이들의 목소리는 교사와 학교당국, 부모들의 무지와 무관심으로 인해 철저히 묵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에 자살한 대전의 여고생이 일진아이들이 괴롭힌다고 선생님에게 상담을 했을 때 선생님이 ‘이건 친구들끼리 문제니까 내가 개입할 일이 아닌 것 같다. 너희끼리 해결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한 것은 아이의 아픔과 그 절박한 목소리를 교사가 외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학교폭력에서 일진아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사회가 함께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여러 사건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진아이들로 인한 피해의 징후가 곳곳에서 드러남에도 교사와 부모, 경찰 등 책임 있는 어른들은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다.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했음에도 아이들의 삶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해석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일진 아이들은 달리 ‘잘나가는 아이들’ 또는 ‘노는 아이들’이라고 불린다. 어른 세대에도 노는 아이들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의 노는 아이들이 아이들 삶과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른 세대의 노는 아이들에 비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어른들이 경험했던 노는 아이들은 학생문화의 주류가 아니었다. 학교 밖에서 일탈행위를 하고 학교 안에서는 기능한 한 조용히 있으려고 했다. 그 아이들이 평범한 아이들을 괴롭히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나 정의감 있는 친구들이 나서서 중재해 줄 수 있었다. 일부 학교 안에서 뺑뺑기 등의 일탈행위가 있기는 했지만 뺏는 아이나 빼앗긴 아이나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요즘 일진아이들이 만들어내는 일진문화는 학생생활을 이끌어가는 주류 문화이다. 그래서 평범한 아이들은 일진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괴롭힐 때 동조하거나 방관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요즘 아이들에게는 일반적인 상황인 것이다.

돈을 갈취하는 것도 합법적이다. 요즘 일진아이들은 뒤에 가서 뺑뺑기를 하지 않는다. 선배한테 상납해야 되니까 돈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순진한 정도에 속한다. 연애기념일(투투데이, 백일기념일), 생일, 빼빼로 데이 같은 기념일에 선물 등의 이유로 돈을 갈취한다. 티켓강매나 오토바이 구입할 때 돈을 모금하는 형식으로 갈취하기도 한다.

왕따 현상 역시 일진문화와 관련된 현상이다. 옛날에는 노는 아이들이 한 아이를 왕따시키려 해도 다른 아이들이 동조하지 않았다. 그러나 요즘에는 일진아이들이 주류로서 학급아이들의 생활문화와 질서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일진아이들이 한 아이를 왕따시키면 다른 아이들도 살아남기 위해, 즉 자신이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해 동조할 수밖에 없다. 만약 괴롭힘 당한 것을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알릴 경우 고자질했다고 찌질이로 놀림을 받는다. 일진아이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몰아가고 다른 아이들도 거기에 동조한다.

또 학생들은 또래집단에서 일어난 일을 어른들에게 말하면 배신자로 낙인찍힌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전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들어줄 사람도 없고 내가 설명하기도 어려워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즉 관계적 곤경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결과, 학교는 우리사회의 위계질서를 반영하여 하나의 계급사회를 이루고 있다. 일진아이들은 귀족, 평범한 아이들은 평민,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은 찌따리는 수직적인 위계질서를 이루는데 이 사회의 법을 만드는 것은 일진이고 그들은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질서를 형성한다. 따라서 일진아이들의 행동은 당연한 사회 질서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것을 일탈행위로 판단하기 어렵다.

4) 우리 사회의 보살핌 기능 부재가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보살핌은 미세한 소리에도 반응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이다. 그러나 교사와 부모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들과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고 보살핌을 제공하는 것을 자신의 일로 인식하지 못한다. 또한 책임 있는 교육당국, 정책당국은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소극적이다. 이런 상황이 일진아이들을 두려움 없이 군림할 수 있게 하는 근본요인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주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우리는 아이들이 마음껏 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침묵의 소리에도 반응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한다. 따라서 표정과 몸짓으로 드러나는 아이들의 침묵의 소리에 반응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아이가 하나라도 있었다면, 또 부모님과 교사가 왕따 징후를 파악할 수 있었다면 아이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이다. 보통 왕따 피해를 당하는 아이들은 잘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의 행동을 지켜보고 그 징후를 파악할 수 있어야한다. 비싼 옷이나 고가의 소지품을 잃어버리거나, 다친 상처나 멍 자국이 몸에서 발견되는 경우, 용돈이 모자란다고 자주 달라고 하는 경우 등이 그 징후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이러한 징후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그러면 아이들을 보살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먼저 어른들이 협동적 연대가 필요하다. 아이들을 관찰하여 학교폭력의 징후를 확인하고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일진아이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알아야 한다. 그런 용어를 알고 그리고 끝까지 도움 줄 수 있는 어른이라는 것을 확인할 때만 아이들이 입을 열기 때문이다.

또한 아이들끼리 서로 보살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이들이 서로 보살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아이들의 일탈행위에 대해서 체벌 등 폭력을 사용해야한다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래서 위험하다. 그러한 사고는 하나의 철학 즉 어린아이들은 통제하지 않으면 무질서해질 것이라는 근본적인 불신을 반영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미국식 인성교육이 이런 사상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보살피는 교실환경,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에 존재하는 서열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서열은 모든 관계에서 즉, 부모와 아이들의 관계, 동료 관계, 친구들 간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관계에 긴장을 불어넣고 고통으로 얼룩지게 한다. 서열은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자원이 아니라 갈등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5)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반성을 하지 않고 고통을 치는 현상이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있다.

대구교육감은 유족과 시민들에게 드리는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일제고사나 월말고사 등 기초학력강화라는 이름하에 진행되는 경쟁위주의 정책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학원폭력의 심각성을 언급하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일선교육현장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점검할 필요할 있다며 범정부차원에서 시급히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역시 자신의 정책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반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런 사회적인 감동도 없고 반향도 없는 공허한 말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1982년 노르웨이에서 학생 3명이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자살했을 때 정부가 보였던 반응과 차이가 있다. 노르웨이 교육부는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전국의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학교폭력에 대처하지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또 수상 직속의 위원회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 속에서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학교폭력은 지속적으로 있어왔지만 전문가와 교사들은 이명박 정부 들어 그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만드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파악과 함께 이명박 정권의 철학과 정책을 검토해야한다.

이명박 정부의 책임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명확하다.

하나는 이명박 정권 들어서면서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은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청소년 폭력예방재단(청예단)에서 연도별 학교폭력목적 시 대응행동의 변화과정을 2007년에서 2010년까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2007년에는 학교폭력 대응 시 모른 척 한다는 아이들이 35%, 말리거나 대응한다는 아이들이 57.2%였다. 그런데 2008년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해에는 모른 척 한다는 아이들이 53.1%로 무려 18.1%나 증가했고, 말리거나 대응한다는 아이들의 비율이 39.1%로 급격히 떨어졌다.

이는 이명박 정권 출범한 이후 우리사회의 극심해진 빈부 격차와 사회적 약자를 못살게 구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깊은 영향을 끼쳤는지 잘 보여주는 것이다. 아이들은 가장 체제 순응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회의 계급질서나 폭력적 분위기를 가장 먼저 모방하고 내면화하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존재 자체가 학교폭력이 아이들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교사들 말을 들어보면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2008년을 전후해서 가해자나 서열이 높은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 지적을 받았을 때 힘이 약한 아이나 공부를 못하는 아

이는 맞거나 심부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는 반응 또는 다른 아이들도 그러는데 나만 걸려서 억울하다는 반응이 급격하게 늘었다고 한다. 그리고 학교폭력 목격 시 대응행동은 이명박 정부 기간 중 계속 악화돼서 2009년에 모른 척 한다는 아이들이 2009년에는 56.3%, 2010년에는 62%가 되었다. 그리고 말리거나 대응한다는 아이들도 급격하게 줄어들어 2009년에 36.2%, 2010년에는 31%가 되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일제고사 강요 등 성적위주의 경쟁정책으로 아이들의 삶을 고통으로 내몬 것 역시 학교폭력의 양상을 더 심각하게 만든 주요한 요인이다.

성적경쟁으로 인해 압박을 받는 교사들이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시간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스트레스가 누구에게 가겠는가? 시험 전에 꼼짝없이 묶여 있다가 시험이후 그 스트레스를 풀기위해 일탈행동, 문제행동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대다수의 교사들이 느끼고 있는 현실이다. 아이들은 극심한 불안과 충동심리를 가장 약한 아이에게 집단적으로 투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달아 이어지는 아이들의 자살 사건은 아이들 훈육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비전의 문제 그리고 현 정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정치적 사안이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도리어 큰 소리 치고 약한 사람들을 못 살게 굴면서도 당당한 대통령의 모습이 결국 잘못을 인정하는 가해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더 폭력적이고 비교육적이지 않은가?

3. 어떻게 할 것인가?

일진문제가 얹힌 실타래와 같은 것이기에 그 해결책 역시 얹힌 실타래를 푸는 방법으로 할 수 밖에 없다. 모든 행위주체가 자기 책임을 인식하고 참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서로의 문제해결방식이 가진 의미를 잘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살사건에 대한 단기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대책을 간략하게 서술한다.

1) 자살사건에 대한 단기 대책

사례분석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아이의 자살과 관련한 대응시스템을 우리사회는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 가족도 학교도 정부도 모두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주체가 자신들이 이번 자살사건에서 어떻게 대응했나, 자신들의 행위 양식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

학생에 대한 1차적인 보호책임자인 교사와 부모는 징후를 인식했지만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해 아이들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고, 학교당국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왜곡 축소하기 급급했다. 경찰은 초기의 학교당국의 설명에 따른 소극적 대응을 하다가 유서 등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어야 수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교육감, 대통령 등 정책 당국자는 자신들이 펴고 있는 정책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어떤 분석도 없이 현장을 잘 모르는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 대책만을 남발

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에게 학교폭력의 징후와 그 때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에 대한 대응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한다. 특히 교사들의 대응이 중요하다. 사건들을 살펴보면 6가지 분석자료 사례에서 3가지 사례가 자살을 시도하기 전에 담임교사에게 담임교사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학교환경에서 교사를 찾아가는 것은 거의 마지막 선택이다. 아이들은 그야말로 마지막으로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갔을 것이다. 따라서 교사와 부모들은 아이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호소할 때 죽기 일보전의 호소라는 인식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 물론 정부와 교육당국이 징후와 공감적 대응 또 적절한 조치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해서 모든 부모와 교사에게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일진을 중심으로 한 학교폭력에 대한 장기 대책

현재 학교폭력을 주도하는 것이 일진이기 때문에 일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수적이다. 교사들은 일진아이들을 평범한 아이들보다 좀 더 힘이 세고, 인맥이 좀 더 넓은 정도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일진은 학년, 학교, 지역사회에서 거대한 조직을 이루면서 일상적인 힘을 행사하는 무서운 존재이다. 뿐만 아니라 성, 운동화, 옷에 대한 모든 유행을 주도하는 선망의 대상이다. 대표적으로 요즘 유행하는 노스페이스 패딩도 일진아이들이 유행하게 된 소위 일진룩이다.

그러면 아이들의 실상은 어떨까?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일진아이들의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5학년이 되면 일진에 가입하면서 6학년 그리고 중학교 선배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 본격적인 활동은 중학교 1,2학년 때이고 3학년이 되면 겉으로는 은퇴를 한다. 왜냐하면 14세까지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소위 촉법 소년이라고 해서 소년원에 수감되지 않고 판사의 판단에 의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되어있다. 15세 이후에는 소년원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법의 맹점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예방대책은 초등학교 5학년 이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5학년말 이후부터는 일진에 대한 선도 및 처벌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일진아이들의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데, 이는 하루 이틀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5개년, 10개년 계획이 필요한 것이다. 먼저 학교와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프로그램 수준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인권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있다. 핀란드의 키바 프로젝트, 노르웨이의 올베우스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처한 환경과 우리민족 특유의 행동특성, 문화심리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해서 현재 완성단계에 있다.

물론 이러한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첫째, 전국 또는 지역차원의 일진조사를 동시에 조사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일진 아이들은 사공간을 초월하여 광속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어른들에게 대응하기 때문에 전국 또는 지역차원의 동시 조사를 통한 신속한 대응과 지도가 필요하다.

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뿐만 아니라 교사인식조사, 국민의식조사까지 포함해서 일진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환기시켜야 한다.

또한, 일진실태조사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특히, 일진을 조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교육청과 경찰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거나 은폐하는 교육청과 경찰청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조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실적 보고를 강요하지 않는 것이다. 실적보고를 하게 되면 교사는 좌절하게 되고 학교는 감추려고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학교폭력 제로화 정책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학교폭력이 일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로화라는 것은 사실을 은폐하도록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 법률’을 일진문제해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비해야 한다.

① 학교폭력단체(일진) 대한 개념과 기준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아이와 어른, 교육청과 경찰청, 시민사회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기준이 달라서 소통이 되고 있지 않다. 일진 문제와 관련된 모든 단위가 모여 전 사회적으로 합의된 개념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

② 법 위반 시 처벌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 일진을 알면서도 은폐, 축소, 조작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다. 법을 위반하는 학교와 교육청, 경찰청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③ 경찰청은 일진과 관련된 사건은 학교장뿐만 아니라 담임교사와 부모, 교육청에 통보하고, 지역사회에 개인의 신상 등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④ 12월 30일 통과된 개정법률에 따돌림과 뺑서들이 추가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일진문화에 대한 통찰과 대책이 결여되어 문제가 있다. 특히, 실적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현장과 당국 또는 사회의 여론 사이에서 심각한 책임 소재와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개악이다.

셋째, 일진 아이들을 돕기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을 제도화해야 한다.

① 사건이 터졌을 때 경찰이 담임교사와 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어떻게 도울지 논의를 할 수 있는 모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일진 아이들 하나하나를 교육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담임교사, 부모, 경찰, 상담가, 지역 전문가 등의 협의체가 필요하다.

② 일진 아이들은 주택단지의 공터, 아파트 단지 놀이터나 공원에 모여 흡연, 음주, 집단런치 등의 일탈행위를 벌인다. 이때 아이들의 이러한 일탈행위에 대해서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사회 차원의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일진 아이들의 일탈행위를 보았을 때 누구든 관리사무소로 연락하는 것, 방송을 하면 주민들이 함께 나가서 대응하는 것, 그리고 아이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양식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Memo



토론 3 잔혹 교육이 ‘학교폭력’ 부른다 : 학생인권과 민주주의가 해답이다

배 경 내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최근 대전과 청주, 대구, 광주 등지에서 연이어 발생한 학생 자살 사건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연일 쏟아지는 선정적인 기사를 보고 있노라면 정말 ‘무서운 10대들’이 ‘갈 데 까지 간 것 같다’는 공포가 자연스레 생겨난다. 부풀려진 공포는 강경책을 불러오는 법이다. 그래서 인지 형사처벌 대상 연령 저하, 구속수사 확대, 무술 유단자 학내 배치 등 온갖 강경책이 쏟아져 나오는 한편, 그 틈을 타 ‘교권 강화’를 외치며 학생인권조례를 탓하는 이들도 등장하고 있다. 우리는 알고 있다. 2005년 일진회 파동, 2010년 졸업식 알몸뿔이 사건 등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쏟아져 나온 대책들이 현재 제시되고 있는 대책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다. 그 대책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실패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더더욱 잘 알고 있다. 이런 식의 대책들이야말로 ‘학교폭력’을 무력무력 자라게 만드는 우리 사회의 폭력적 논리를 더욱 강고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통제와 처벌 위주의 방식은 ‘권력자’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음지로 폭력을 다만 ‘이동’시킬 뿐이며, 음지에서 학생들은 더욱 폭력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진정한 반성이 없는 자리에 제대로 된 해결책이 들어설 리 만무하다. 지금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진실되게, 깊이있게 던져야 한다. 학생들은 왜 폭력의 논리에 길들여지게 되었나. 학생들은 왜 (가해자로서든 피해자로서든) 폭력에 취약한 존재가 되어야 했는가. 그리고 왜 학생들은 폭력과 그 폭력의 피해자들에게 무감한가.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사회의 깊은 성찰이 없고서는 우리는 더 깊은 폭력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학교폭력’은 하나의 원인으로부터 비롯되는 것도 아니고,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다. 패자(敗者)와 약자(弱者)를 징벌하고 차별하는 사회구조와 학생을 분노와 절망으로 내모는 약탈적 경쟁교육은 힘센 자만이 살아남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을 짓밟고 착취해도 된다는 가치를 키워내는 자양분이 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생활시간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과연 어떤 가치를 가르치고 있는지를 되묻지 않으면 안 된다. 학생들에게 정당성 있는 규범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과 관계들이 해체된 상황에서, 영화 <도가니>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 억압적 훈육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반(反)폭력과 반(反)차별의 가치를 배우고 익힐 것을 기대하는 것부터가 너무 큰 욕심이다. 학교가 이러하기에 ‘학교폭력’(학교폭력이라는 개념부터가 학생간 폭력만을 문제삼고 학교가 행하는 공적 폭력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차별적 개념이다)의 가해자들은, 폭력적 훈육방식이 그러했던 것처럼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많은 이유들을 대곤 한다. ‘재가 맞을 짓을 했다. 재는 찌질하니까 그런 대접을 받아도 싸다. 장난으로 그런 거다.’ 이들이 동급생이나 후배들을 괴롭

하는 방식 역시 전형적인 학생 훈육 방식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해 초 해병대 총기 참사를 통해 우리가 잊고 있었던 진실을 재확인한 바 있다. 집단따돌림, 동료에 대한 착취 등은 군대처럼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발생하기 쉽다는 너무도 당연한 진실 말이다. 당연히 학교를 지배하고 있는 명령과 복종의 관계, 생활지도와 교육이라는 외피를 쓰고 오랫동안 묵인되어 왔던 ‘비가시화된 폭력’을 내버려둔 채 다만 학생들 사이의 폭력만 문제시한다면, 폭력을 근절하기는커녕 사회와 학교의 ‘위선’에 대한 조롱만 키울 뿐이다. 학생을 체벌로든, 징계에 대한 위협로든 힘으로 제압하는 방식을 대책이라고 내놓는 이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지난해 3월, 우리 사회와 교육의 잔혹상이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를 보여준 조사가 나와 충격을 준 바 있다. 국제교육협의회가 전세계 36개국 중학교 2학년 학생 14만6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제 시민의식 교육연구(ICCS) 자료를 토대로 ‘사회적 상호작용’ 지표를 산출한 결과, 한국이 35위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OECD 회원국 22개국 중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부문별로 보면, 지역사회나 학내 자치활동에 참여한 실적을 평가한 ‘관계지향성’, 그리고 사회에 대한 신뢰를 평가하는 ‘사회적 협력’ 부문의 점수가 1점 만점에 모두 0점을 기록했다고 한다. 한 마디로 ‘더불어 사는 능력’, 곧 다름을 받아들이고 이웃과 소통하며 우정을 나누는 힘이 전무한 이들을 길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교육의 자화상임을 말해주는 셈이다. 더불어 사는 능력을 신장시키기는커녕,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최소한의 ‘아픔에 대한 공감 능력’조차 외려 퇴화 또는 파괴시키는 공간에서 폭력이 묵인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이, 너무도 두렵고 외로웠을 피해자들이 결국 죽음을 택하기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고 손을 내밀만한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왜? 대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일이 오랫동안 이루어지는데도 왜 주위 사람들은 눈치 채지 못했을까? 왜 장난이 좀 심한 정도라고만 생각했을까? 진실을 마주하기가 두렵기 때문이다. 그들 역시 대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철저히 신뢰가 파괴된 공간은 피해자들을 더욱 고립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 CCTV 설치, 교사에 대한 인사 상 불이익 등 ‘개인화’된 해결 방식으로는 결코 불신이 키우는 폭력과 피해자의 고립을 해결할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폭력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공간은 만들어낼 수 없다. 폭력은 어느 공간에서나 불현듯 예기치 않게 일어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폭력에 대한 성찰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 폭력의 피해자가 외려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 문화, 폭력이 발생했을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믿음이 형성되어 있는 공간에서는 적어도 폭력의 발생 가능성이 낮고, 폭력의 피해가 덜 치명적이라는 사실이다. 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논의조차 봉쇄된 공간에서는 폭력이 깊게 뿌리를 틀고 은폐될 수밖에 없다. 학교가 안전한 곳이라는 믿음은 둘째치더라도, 적어도 학교가 비폭력적 문제해결 방식을 선택하는 모습, 소수자들을 존중하는 모습, 발생한 폭력에 대해서는 함께 책임지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주었다라면 문제가 이토록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학교폭력’은 교육의 내용과 학교에서의 경험을 인권친화적으로, 민주적으로 재조직할 때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을 뗄 수 있다. 학교가 먼저 대안적 관계와 문제해결 방식을 보여줄 때, 학

생들을 문제해결의 주체로 초대할 때에만 학교폭력의 해결뿐 아니라 예방도 가능해진다. 학생인권조례에는 이미 많은 해결책이 담겨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해 단호히 작별을 구하자고, 폭력을 정당화하고 희생양을 만들어내는 차별과도 결별하자고 제안한다. 학생들의 공감 능력, 의사 표현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자치활동과 인권교육의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상담과 복지의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만들어두고 있다. 물론 학생인권조례는 시작의 일부일 뿐이다.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 마련, 교사의 업무 경감과 학생 생활교육을 위한 여건 확보, 착취적 경쟁교육 정책의 폐기 등이 함께 추구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 모든 노력을 다하면서 가해 학생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려도 늦지 않다.

Memo



첨부자료 “학교폭력 관련 신문 사설 모음”

[동아일보사설] 왕따와 폭력, 학교와 교사 함께 책임져야

2012. 01. 03

지난해 12월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중학교 2학년생 S 군 사건에 대해 학교 측은 “우리 학교에는 학교폭력은 없다” “왕따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동료 학생들은 “학교와 선생님들을 도무지 믿을 수 없다”며 장례식장에서 ‘침묵시위’를 벌였다.

학교폭력은 학교와 교사, 이를 감독하는 관할 교육청에 연대 책임이 있다. 최근 대법원은 2001년 3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친구들의 집단폭행을 견디다 못해 아파트 4층에서 뛰어내린 6학년 학생의 부모가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학교와 담임교사는 부모를 대신해 학생의 학교생활을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교육은 교사와 학생의 소통에서 시작된다. 학교폭력을 몰랐다고 발뺌하는 것은 교육자의 자세가 아니다. 교사와 학교가 학교폭력을 추방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떤 대책도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추가적인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학교 측이 전학 퇴학 같은 조치로 가해자를 피해 학생으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데도 지난 3년간 격리처벌을 내린 경우는 전체 학교폭력의 6.2%에 그쳤다. 정년을 앞둔 일선 교장들이 학교폭력이 외부로 불거지는 것을 꺼려 덮고만 가려다가 사태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많다. 초중고교에서 여교사 비율이 70~8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주로 거친 남학생들이 가해자인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지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경찰 등 관계 당국은 단속을 강화하고 학교폭력을 일반 형사사범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대책을 부랴부랴 내놓았다. 하지만 학교폭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려면 단속 이전에 예방이 중요하다. 학교폭력을 사전에 차단할 전문 상담 인력을 학교 안에 상주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부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앞세우는 바람에 학생 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는 하소연이 일선 학교에서 나온다.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생활지도를 못해 왕따와 폭력을 예방하지 못함으로써 죽음으로 내몰린 학생들의 인권은 누가 보호해줄 것인가. 여러 교육주체들이 학교폭력 추방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만 비극을 막을 수 있다.

[중앙일보사설] 학교 폭력 근절 해답은 학교에 있다

2012. 01. 03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어린 학생들의 비극적인 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전해지고 있다. 이를 접하는 학부모들의 가슴은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 평소엔 남의 일 대하듯 이 문제를 처리했던 학교는 물론이고, 각종 대책을 쏟아내는 정부가 영 미답지 못하다. 정부 차원의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은 1995년 서울의 한 고교생 투신 자살 사건 직후 나왔으며, 비슷한 대책이 16년째 되풀이되고 있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결국 당하는 학생과 피눈물 쏟는 가족만 서러울 뿐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올 만하다.

학교 폭력 대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우선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엇그제 경찰청이 형사 1만2000명을 동원해 학교와 학원과 PC방 일대를 순찰하게 하고, 폭력 학생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발표한 것이 대표적이다. 괴롭힘 등 폭력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맞춰 문자와 메신저, 웹 등을 통해 학교 안팎에서 지속되고 있는 건 최근 일련의 자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게다가 전국 어느 초·중·고를 가더라도 보통 학생들은 ‘일진’이라는 폭력적인 존재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싸움 잘하는 아이라는 의미였던 일진은 이제 일반 학생들 사이에서 약한 학생을 지목해 따돌리게 하고, 협박과 폭행을 가하도록 사주하는 학교 폭력의 정점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 어디선가 날아올지 모를 폭력이 두려워 신고를 못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학교 밖은 형사를, 학교 안은 상담 교사를 배치한다는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건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물어봐도 자명한 일이다.

현재 중·고교에서 당장 손봐야 할 과제는 일반 학생들이 느끼는 두려움을 없애는 일이다. 두려움의 추방은 아이들 사정을 그나마 상대적으로 더 잘 아는 학교가 이 문제에 강력하게 대처하도록 학교에 권한을 부여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학교가 방관자로 남아 있는 한 어떠한 정부 대책도 변죽만 울리고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연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에 따라 학교가 폭력 학생에 대해 강제 전학시킬 수 있도록 한 것도 학교가 폭력 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취지였다.

권한을 갖게 된 학교가 필요로 하는 건 규율이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담임 교사가 학부모를 소환하고, 다시 반복하면 경고를 거쳐 학교 밖 대안학교로 넘기거나 강제 전학시키는 절차를 학생·학부모들에게 분명히, 반복적으로 알게 해야 한다. 일반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위해를 가하는 일진 등 가해 학생들은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로 보내져 치료와 교육을 받게 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폭력 구조의 정점을 건드리지 않고서는 신고를 두려워하는 일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처럼 학교 폭력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이 안 될 정도로 뿌리가 깊다. 그만큼 대책도 다각도로 강구돼야 한다. 그 중심은 학교다.

[문화일보사설] 학교 폭력 예방 위해서도 교권확립 절박하다

2012. 01. 02

중·고등학생들의 학교 내 폭력의 심각성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12월29일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은 학생 폭력조직인 이른바 ‘일진회’ 소속의 같은 학교 학생 3명에게 지난해 4월부터 무려 29차례에 걸쳐 폭행과 협박, 금품 갈취 등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의 상습적인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지난해 12월20일과 3일 각각 자살한 대구의 한 남자 중학생과 대전의 한 여고생에 이어 학교 폭력의 참담한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전국 학교에 만연한 학생들 사이의 폭력을 예방·차단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청이 1일 ‘학교 폭력 단속활동 강화 지시’ 공문을 전국 일선 경찰서에 보내고, 폭력 학생을 일반 형사사범 차원에서 다루면서 일진회 등 폭력 서클의 해산을 유도하겠다고 천명한 방침이 빈말에 그치

지 않고 실효성 있게 추진돼야 함은 물론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왕따·폭력 가해 학생 등을 교육하는 대안학교인 '위(Wee) 스쿨'을 현재 7곳에서 전국 16개 시·도마다 한 곳씩으로 확대하고, 상습적인 일탈 학생을 선량한 학생들로부터 격리하겠다는 계획 등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붕괴된 교권(敎權)부터 바로세워야 한다. '학생 인권' 허울 아래 교사가 학생들의 회롱과 폭력 대상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일탈 학생에 대한 훈육과 엄격한 제재를 기대할 수는 없다. 교권 확립이 절박하다.

[조선일보사설] 교육감들, 며칠이라도 교사 해보고 학교 폭력 말하라

2012. 01. 02

경찰청이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해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가해 학생은 구속을 포함해 엄한 처벌을 하라고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학교 폭력과 왕따(집단괴롭힘)는 은밀하게 벌어지는 게 대부분이고 물리적 폭력만이 아니라 정신적 폭력과 압력의 형태를 띠는 게 많아 경찰이 나선다고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니다.

중·고교생처럼 신체는 커졌는데도 정신의 틀은 몸을 따라가지 못하는 성장기 아이들은 또래로부터 육체적 폭력을 당하면 잠을 못 이루거나 집중력이 떨어져 공부를 할 수 없고, 평소에도 불안감에 어쩔 줄 모르는 증세를 동반한 마음의 병에 허덕이게 된다. 왕따 같은 심리적 고립에 몰리면 몸이 제대로 발육하지 못하고 각종 통증에 시달리는 신체적 부작용이 뒤따른다.

학교 폭력을 막아줘야 하는 가장 큰 책임은 교사들에게 있다. 문제는 설혹 교사가 지(智)·덕(德)·체(體)가 겸비된 교육을 하겠다는 의욕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의 학교가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이나는 것이다. 작년 6월 교총의 초·중·고 교사 3000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무려 96.9%의 교사가 "수업 중 문제 학생을 발견해도 일부러 회피하고 무시한다"고 답변했다. 꾸짖어봐야 문제 학생이 그 자리에서 대들 어 봉변당하기 십상이고 학교 폭력을 제지하겠다고 나서봤자 가해 학생이나 그 부모들의 반발에 휘말리는 일이 잦아 학교 폭력을 학생들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로 넘겨버리며 보고도 못 본 체하고 만다.

심신(心身) 성장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돌발적(突發的)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중학생들을 지도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여교사들에게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예쁘네" 하면서 성희롱에 가까운 행동까지 하기 일쑤다. 교총 설문조사에서 교사 64%는 "(초·중·고생 가운데) 중학생이 가장 지도가 어렵다"고 답했다. 그런 중학교에 여교사 비율이 65.7%나 되니 교사가 학교 폭력에 제동을 건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친(親)전교조 교육감들은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교권(敎權)부터 무너뜨려 버렸다. 교육감들이 시범적으로 며칠이라도 그런 중학교에서 현장 교사를 해봐야 한다. 그래야 학생인권조례만 갖고 학교 폭력을 막을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문화일보사설] 학교폭력 없애려면 교권부터 세워라.

2012. 01. 01

새해부터 시행되는 개정 학교폭력 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종류에 강제적인 심부름을 포함하고 집단 따돌림의 심각성을 반영, 따돌림 정의 항목도 신설했다. 다른 학교로 전학 조치된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이

있는 학교로 다시 올 수도 없다. 경찰도 1만2000명의 외근 형사를 동원해 학원가, 공원, 학교 주위, PC방, 오락실 밀집지역 등을 집중적으로 순찰하며 학교폭력과 전쟁을 벌이겠다는 방침을 선언했다.

문제는 법과 제도가 아무리 잘 갖춰져도 학부모와 교사들의 관심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는 사실이다. 특히 교사가 학교폭력을 없애는데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학생들과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그들의 상태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담임의 노력으로 왕따 없는 교실 만들기에 성공한 사례가 많은 것이 이를 증명해준다.

교사는 수시로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없는지, 반에서 누가 말썽꾸러기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경우 즉각 해당 부모와 연락해 사전에 이를 방지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 경우 학부모도 적극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교사와 학부모의 노력만으로도 학교폭력의 상당 부분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편향된 지식을 심어주기에 열심인 일부 교사도 제자들이 학교폭력에 시달리지는 않는지부터 먼저 살펴야 할 것이다. 학생들에게 이념에 편향된 역사인식을 주입하는 일에 몰두하다 만에 하나 폭력의 희생자가 나올 경우 이른바 참교육은 허울 좋은 구호로 전락한다. 이런 관점에서 학생 인권만 강조한 서울학생인권조례도 다시 점검해봐야 할 것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가해 학생 간접 체벌, 학생 소지품 검사, 초등생 일기장 검사 등을 인권 침해라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학생 생활지도가 힘들다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한다. 새해에는 교사와 학부모, 경찰 등 모든 사람이 힘을 모아 우리 사회가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한국일보사설] 학교 폭력엔 경찰보다 교과부가 나서야

2012. 01. 01

주변의 폭력과 따돌림에 절망한 어린 학생들이 목숨을 버리고 있는데 정작 관심을 기울여야 할 교육과 학기술부가 별 말이 없다. 지난달 29일 학교폭력 예방 관련 시민단체들이 교과부 앞에서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어 한 학생은 '연 2회 폭력피해 실태조사가 교과부 대책인가?'라는 글을 들고 1인시위를 했다. 최근 상황을 보면 이주호 장관은 물러나고, 담당 공무원들도 자리를 내놓으라는 그들의 주장에 공감의 간다.

학교 현장에서 느낀 그들의 주장은 당연해 보인다. 학교폭력 전문가 예방교육, 학생과 교사의 인권교육 의무 실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외부전문가 중심 구성, 지역교육청별 시민감사관제도 신설 등이 그것이다. 정부가 2004년 학교폭력 예방법을 제정하고, 교과부가 지난해 7월 '종합적 근절대책'으로 학교폭력을 뿌리뽑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여전히 이러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니 그 동안 교과부가 무슨 대책을 세워 어떻게 실행해 왔는지 짐작할 만하다.

어제 경찰청은 1만2,000명에 이르는 형사들을 동원해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학교와 학원가 우범지대 순찰을 강화하고, 수업 종료 시간대에 주변에 형사기동대를 배치하겠다고 한다. 학

교폭력 방지를 중요한 민생치안의 일환으로 여기는 발상인데 문제가 불거진 학교폭력의 본질과 원인을 잘못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대구와 광주 등에서 피해학생의 자살로 표면화한 학교 내부의 폭력행위를 그런 식으로 막자면 1만2,000명이 아니라 120만 명의 형사가 동원돼도 불가능하다.

학교 학생 학부모가 예방과 치료의 주체가 되어야 하므로 교과부가 주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장의 심각성을 모르고 적극적인 의지도 없으니 주도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청사 앞에서 호소하고 있는 시위자들의 주장에만 주목해도 방법은 있다. 그 요구들은 오랫동안 교육현장에서 나왔던 내용이다. 방학이어서 개학 때까지 다소 시간이 있는 것이 다행이다. 교과부가 적극 나선다면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매일신문사설]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학교 폭력과 청소년 자살

2011. 12. 23

친구들의 괴롭힘에 시달리던 한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최근 대구에서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자살한 A군은 유서에서 “친구들이 집에까지 찾아와 폭행하고 물고문이다 심지어 목에 줄을 걸고 음식물을 주워 먹도록 하는 등 학대했다”며 친구 2명의 실명까지 언급했다. 교사와 학교, 교육 당국의 무관심 속에 어린 영혼이 끝내 스스로를 버려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다는 것은 결코 정상이라 할 수 없다.

놀랍게도 A군이 다니던 학교에서 5개월 전에도 한 여학생이 친구들의 왕따를 고민하다 자살했다고 한다. 도대체 학교 측이 생활지도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불상사가 거듭되는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 당시 이 여학생은 담임에게 편지를 보내 도움을 요청했지만 교사와 학교 측이 어설픈 대응하는 바람에 일을 키운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학교 측이 “서로 상관없는 일”이라고 둘러대는 것은 학교 당국의 무책임함과 안이한 상황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구생명의전화 자살예방센터의 청소년 자살 실태 조사에도 나타나듯 자살 충동을 느끼는 청소년들이 교사에게 속내를 털어봐도 해결은커녕 일만 더 커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교사와 학교의 학생 지도와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다. A군의 자살도 해당 학교가 여학생 자살 사건에 대해 진상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대로 세웠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

대구시교육청도 책임을 면키 어렵다. 22일 교육감 담화문을 내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학교 폭력 신고 시스템 구축 등 다각도의 대책 마련을 다짐했지만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늦었지만 해당 학교의 학생 생활지도에 허점이 없었는지 따져 불상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경찰도 가해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엄중히 묻고, A군 외에도 피해를 당한 아이들이 없는지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매일신문사설] 학교폭력 대책, 이대로는 안 된다

2011. 12. 29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자살한 대구 중학생 사건을 계기로 국회 교과위가 28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에 관한 법률’(학교폭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따돌림의 정의를 신설하고 신종 학교폭력에 관한 규정, 유명무실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활성화 등이 골자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대응 조치 강화라는 취지야 충분히 공감하는 바다. 하지만 실제 교육현장에서 적용되고 작동될 수 있을지를 따져 보면 또 헛구호가 되거나 없을지 우려된다.

그동안 국회와 정부는 학교폭력과 따돌림이 이슈가 될 때마다 법을 손질하고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대구 사건에서 보듯 학교폭력법이나 그 많은 정부 대책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허수아비에 불과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는 말할 것도 없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실태 조사, 신고센터 운영, 교원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학교폭력에 절망한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지경에 이르도록 학교와 당국이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면 백약이 무슨 소용인가.

그런데도 최근 대통령까지 나서 학교폭력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또 지시했다. 학교폭력 대책이라고 나온 것만도 벌써 세 차례인데 대책이 없어 이런 불상사가 반복되고 학교폭력·따돌림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일이 터질 때마다 대책 수립 목소리만 높일 게 아니라 실제 이런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학교폭력을 뿌리 뽑으려면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따돌림과 폭력은 어느 한쪽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공동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신고와 전문적 진단, 예방 대책, 처벌 등 기존의 학교폭력 해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전면 재검토하고 전 사회적으로 비상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매일신문사설] 강한 처벌과 조치로 학교폭력 뿌리 뽑아야

2012. 01. 02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경찰청은 1일 상습 학교 폭행·금품 갈취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외근 형사들을 대거 동원하고, 심각한 학교폭력은 일반 형사 사범 수준으로 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생활 안전 차원의 접근이나 솜방망이 처벌로는 더 이상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동안 상습 폭행이나 따돌림 등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예방 및 단속 활동이 이뤄져 왔다. 하지만 자치위의 역량만으로는 학교폭력에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조현오 경찰청장이 최근 학교폭력 문제를 새해 민생 치안의 최대 중요 정책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처를 지시한 것도 학교폭력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말해준다.

물론 엄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견해도 없지 않다. 하지만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지금처럼 봉사 명령 등 가벼운 징계만으로는 학교폭력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전국 학교의 자치위가 최근 3년간 심의한 학교폭력 조치 현황에 따르면 가해자 격리 등 중징계는 6.2%에 불과했다. 2만 2천여 건의 학교폭력 사건 중 60% 이상이 교내·사회 봉사 등 단순 봉사 활동 명령에 그쳤고, 가해자 장기 격리와 같은 엄한 처벌은 전학 5.6%, 퇴학 0.6%에 불과했다.

이처럼 처벌이 형식적이고 단기간에 끝나는 바람에 재발 방지 등 추가 피해를 막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다. 학교폭력은 더 이상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적인 관심사다. 앞으로 학교폭력

발생 시 심할 경우 형사 처벌도 감수해야 한다. 또한 가해 학생을 바로 격리하고 치료와 교육을 병행해 예방과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국민일보사설] 학교폭력 은폐해서 될 일 아니다

2011. 12. 27

국가인권위원회가 어제 공개한 학교폭력 관련 상담사례는 교사와 교육당국의 무사안일주의가 피해 학생의 고통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살한 대구 중학생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학교 측은 장기간 진행돼온 교내폭력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려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설사 알았다라도 덮기에만 급했던 미온적 대처가 오늘날 학교폭력이 만연한 상황을 촉발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소극적인 학교 측의 태도는 근본적으로 상급기관으로부터의 문책이나 감사 등을 우려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등도 근원적 해결보다는 당사자 합의를 통해 학교폭력 문제를 봉합하는 역할에 머물러온 것이 사실이다. 문제가 불거질 경우 다른 학부모들의 항의와 교육청 조사 등 번거로운 절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피해 학생이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였는데도 무관심하던 학교 측은 부모들이 인권위에 진정하자 그제야 복귀 후 생활적응을 돕겠다는 대책을 내놓는 경우도 있었다. 집단폭행을 당해 턱뼈가 부러진 아들의 학교를 찾아간 학부모에게 막말을 해 낸 학교장도 드물지 않다. 교육자들이 자발적으로 학교폭력 예방에 나서지 않고 알아도 모른 척하는 행태가 관행으로 굳어진 지 오래라는 얘기다.

초등학교 시절 학교 부회장까지 지냈던 모범학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쉬쉬할 일이 아니다. 따라서 학교 측은 학생폭력이 발생할 경우 이를 숨기지 말고 당당히 드러내고 상급기관도 이를 문제 삼아 해당 학교에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다만 보복 가능성을 고려해 피해 학생의 신원은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은 학교와 경찰, 학부모, 정신과전문의 등이 합심해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난제다. 아무리 훌륭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들 학교폭력이 난무하는 현실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교육당국은 학교폭력이 사라지게 할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길 촉구한다.

[한겨레사설] 학교폭력, 학생인권조례가 근본 대책이다

2011. 12. 29

대구 중학생 투신자살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 문제가 나라를 들끓게 하고 있다. 제2의 도가니 사태라 할 만하다. 었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현지에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어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열려 대책을 논의했다. 마치 금시초문이라는 듯 부산을 떠는 대통령이나 국가기관이 깨름칙하긴 하지만, 이번 기회에 근본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논의 결과 교육감 공동성명도 나오고 교육부도 두 차례에 걸쳐 대책을 내놨다. 내용은 대체로 학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쪽이다. 제대로 적발하지 못하고, 드러난 경우에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서 악화됐다고 판단한 셈이다. 피해자 신고와 삼자 고발을 장려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며, 부실처리한 학교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그 결과다. 결국 가해자를 엄격히 격리해 해결하자는, 사후처벌 강화 방안이다.

그러나 사후처벌의 한계는 명확하다. 그동안 처벌 수위를 계속 높여왔지만 학교폭력은 악화되기만 했다. 지난해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 처벌 수위를 높였지만, 친구의 피해를 알고도 알리지 않은 학생은 2009년 56%에서 2010년 62%로 늘었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조사) 2007년엔 35%였다. 직접피해자는 열 명 가운데 단 두 명만이 신고했다. 벌칙 강화와 엄격한 시행에 앞서 예방교육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핵심은 인권교육이다. 상대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폭력이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어떤 신체적 정신적 왜곡을 가져오는지 가르치고, 역할극 등을 통해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성적, 체력, 빈부 등에 따른 차별과 배제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물론 경쟁의 정글이 되어 탈락자를 양산하는 지금의 학교체제에선 인권교육 역시 한계가 있다. 힘과 질서에 복종하고, 소수자와 약자를 배제하고, 다름을 거부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포기해선 안 된다.

이를 위한 실마리가 학생인권조례다.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이 서로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입장 바꿔 생각하도록 하고, 위반자는 자율 규제한다면 폭력은 크게 줄 것이다. 문제는 교과부다.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조례마저 폐기하도록 온갖 꼼수를 부린다. 그러고도 학교폭력 근절을 외치고 있으니, 위선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경향신문사설] 학교 폭력, 은폐 풍토부터 근절해야 한다

2011. 12. 28

학교 폭력의 원인에 대한 진단이 나오면서 학교의 책임이 부각되고 있다. 학교가 사전 예방은커녕 사후 대응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문제를 키운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도 그제 학교 폭력 상담사례를 발표하면서 교사와 학교, 교육 당국의 무사안일주의가 피해 학생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 폭력을 일단은 덮고 보려는 관행이 피해 학생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게 무리가 아니다.

최근 밝혀진 사례들은 학교의 교내 폭력에 대한 책임 방기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교사들은 교내 폭력을 학생들 사이의 가벼운 말다툼이나 장난쯤으로 여기고, 학교 측은 폭행 증거가 없다고 무시하기 일쑤다. 심지어 어떤 학교장은 폭력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학부모에게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켰느냐는 모욕적인 발언까지 했다고 한다. 물론 학교 폭력의 책임은 학교와 가정, 사회 등이 함께 나눠 갖는 게 맞다. 그럼에도 학교의 책임이 강조되는 것은 학교가 학생들과 가장 많이 접촉하고 있어서 폭력의 실태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교가 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또 일이 터진 뒤에는 서둘러 사건을 봉합해왔다면 문제가 해결될 리 만무하다. 전문가들은 학교 측이 학교 폭력을 축소·은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상급기관으로부터 문책과 승진의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학교 폭력이 벌어졌다면 그 사실을 먼저 드러낸 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빠른 해결책이다. 그러기 위해선 교육 당국

이 이를 문제 삼아 해당 학교에 불이익을 주는 풍토를 개선하는 게 먼저다.

대법원은 어제 한 고교에서 벌어진 집단 괴롭히기 사건에 대해 가해 학생 부모뿐 아니라 학교, 학교를 감독할 지방자치단체까지 공동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비단 이 판결이 아니라도 학생 폭력에 대한 학교의 무관심과 은폐는 용납되어선 안된다. 폭력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사태 해결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학교와 교사가 있는 한 어떤 대책도 실효를 거둘 수 없다. 학교 폭력을 해결하는 일은 폭력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교육 당국도 인성 교육과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폭력을 근절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으며, 남을 괴롭히면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각인시켜야 한다.

[파이낸셜 뉴스] 조현오 "학교폭력, 적극적으로 접근할 것"

2012. 01. 03

조현오 경찰청장은 3일 "형사법적 사고의 틀을 넘어 학교 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14세 미만 청소년은 형사법상 미성년자이므로 처벌을 못해 경찰이 접근하면 뭐하나 하는 시각이 있었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이 같은 인식을 탈피하겠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가급적 빨리 학교 폭력 전수조사를 해주면 좋겠다"며 "매우 심각, 심각, 보통, 일부 문제, 안전 등으로 등급을 나눠 경찰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개입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전했다.

이어 "문제 학생에 경찰이 접근하면 이들을 위축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최근 일선 경찰 간부가 청장직 사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 "솔직한 말로 더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자리에 연연하지는 않지만 지금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해 청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 청장은 청장 퇴진 요구 기자회견으로 파면된 채수창 전 강북경찰서장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고 법원이 최근 판결을 언급하면서 "조직 화합을 위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준을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마이뉴스] 자살을 부르는 교실 왕따 근본원인은? 학교 폭력, 근본적 이유는 교원승진제도

2011. 12. 28

학교폭력, 승진제도, 대구학생자살, 교실왕따

최근 연이어 터져 나오는 학교 내 폭력으로 인한 비극적 "학생 자살, 교실 왕따"는 대한민국의 학교가

그리고 교원들이 그 본래 역할과 기능을 도외시킨 채 엉뚱한 곳에 신경을 쓰게 만드는 교원승진제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교사경력 20년이 다되어가는 필자의 경험으로 보아도 이러한 생각은 확고하다.

현재의 학교와 교원들은 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 원인을 찾고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들이 근무하는 동안 이러한 사건이 표면화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기를 바라고 있다. 이유는 최근 들어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학교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이러한 사건은 계속 일어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문제의 폭탄을 해체하기보다는 폭탄을 피하거나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학교와 교원들은 학생들의 생활교육이 가장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결하려고 적극 나서지 않을까? 필자의 생각은 첫째 교원들의 업무 중에서 학생들의 생활교육이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교원들은 이러한 해결노력이 표가 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고, 둘째 현재의 학교시스템은 이러한 일들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교육에 매진하는 교원들이 우대되고 있지 않는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학교에 폭력사건이 발생하면 일단 사건이 밖으로 알려지지 않으려 하는 것이 모든 학교의 공통된 대처 방법이라고 본다. 이유는 근본적 해결방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있다고 해도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는 학교구조와 문제발생 학교에 대한 징계가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경력점수, 근무평정, 연수성적, 가산점으로 이루어진 교원승진제도는 승진점수를 0.001점까지 세분화하여 부과하는데 가장 교악한 것이 근무평정(이하 근평)과 가산점이다.

근평은 교사들의 상호평가인 다면평가를 도입하였지만 근평의 70%를 교감과 교장이 주고 있어 학교에서 근평의 순위를 정하는데 다면평가의 영향은 거의 없다. 따라서 교감의 근평도 정하는 교장의 영향력 하에 놓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장이 마음대로 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가산점은 부장경력, 연구시범학교,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 학교 등 19개 항목으로 나뉘는데 학교에서는 이 가산점을 받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또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학교로 대거 초빙교사나 전입교사요청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여러 교사들을 대한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 학교에서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다보면 이러한 교원승진제도에 대해 무감각할 수 밖에 없는데, 교사 본인이 승진을 마음먹는 순간 이러한 승진경로에 따라 모든 것을 올인하게 된다. 승진에 올인한 교사는 대체로 모든 것을 승진에 유리한 쪽으로 펼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설령 비민주적이고 비교육적인 일들이 학교 안에서 벌어지더라도 눈을 감거나 애써 외면할 수 밖에 없다.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를 않고 귀가 있어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문제는 여기에서 비롯된다.

그렇지 않아도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에 쌓여있는 학생들은 그들 나름의 스트레스해소 방법을 찾다 보니 친구들을 괴롭히고 거기서 희열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학생들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보고 원인을 찾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학교가 문제가 생기면 승진에 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에 쉬쉬하며 문제를 덮기에 치중한다.

물론 교원승진제도 하나 때문에 이러한 끔직한 자살 사건이 일어난다고 확정지을 수는 없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사회복지 안전망이 갖춰지지 못한 점과 대학입시를 향한 비정상적인 학력경쟁 등 해소하고 혁신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당장 학교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학교 안에서 만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하게 하는 구조가 급선무이다.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따뜻하게 보살피 주는 교사가 우대받고 또한 그러한 교사들이 학교에서 리더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야만 한다. 현재의 교원승진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문제를 확대 재생산시키는데 일조할 것이다. 학생들에게 교원을 온전히 돌려주기 위해서라도 교원승진제도 시급한 혁신이 필요하다.

[세계일보] 학교폭력 은폐·축소 땀 징계 추진

2011. 12. 29

범정부 대책안 1월 초 발표...교원단체 "제재보다 독려를"

정부가 학교 내 폭력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교원에 대해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 근절 태스크포스(TF)팀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교내 폭력을 은폐·축소 보고한 교장·교사를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다음달 6일쯤 학교폭력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나올 것"이라며 "여기에는 학교폭력 1차 관찰자이자 인지자인 담임교사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고 법률에 명시된 학교장의 의무 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4년 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현황과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조치 및 결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에게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장들은 교내 폭력사건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자신과 학교에 미칠 부작용 등을 우려해 '쉬쉬'하거나 자치위 처분을 제때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 교사들은 학교폭력을 인지했을 경우 교장이나 자치위에 보고할 의무만 있을 뿐 자체적으로 해결할 권한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근절 TF팀은 교과부가 지난 6월 내부적으로 검토한 '학교폭력 은폐·축소 교원 징계 방안'을 토대로 학교폭력 은폐·축소 개념 정의 및 허용 횟수, 교육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따져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 형태로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교원단체

들은 학교폭력에 관한 교사들의 적극적인 대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대책이 제재보다는 독려에 맞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박종철 학생생활국장은 "담임교사의 경우 교과수업, 행정업무 등으로 솔직히 학생 지도에 신경 쓸 여력이 없고 법적으로도 '네가 나설 문제가 아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조화·종례 및 상담 시간이 일주일에 3~4시간 되는 만큼, 이를 공식 수업시수로 인정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학교알리미'에 게재하도록 돼 있는 학교폭력 심의견수를 학교의 개선 노력 등이 드러나는 지표로 바꿔 이를 학교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교과부에 제출했다.

[연합뉴스보도] 시·도교육감들 "12세이상 소년법 적용 배제해야"

2011. 12. 30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의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29일 대구에서 만나 대책을 협의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일부 교육감들은 학교폭력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현행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결과가 주목된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대책으로 소년법상 형사처벌 대상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면서 "아울러 성폭력과 같이 학교폭력도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교육감은 또 "교육당국이 학교폭력 가해 중학생을 강제로 전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출석정지 기간도 현행 `1회 10일 이내'에서 `연간 30일 이내'로 늘려야 한다"면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부모 소환제를 도입하고 방송통신중학교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일부 교육감들도 피해 학생 치료 프로그램의 강화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단위 학교 차원의 역량과 책임, 사후조치를 강화하고 학교폭력 전문기관, 전문가, 학부모 등의 외부 자원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는 최근 학생 자살과 학교폭력 사건이 잇따라선지 매우 침통한 분위기였고, 관련 법·제도 정비와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는 주문도 많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보도] “경쟁교육서 밀린 아이들 잘못된 집단주의로 변질”

2011. 12. 27

10개월 동안 동급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다 결국 죽음에까지 이른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다. 왜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이 이처럼 심해지고 있는 것일까.

손재환 한국청소년상담원 선임상담원(38)은 “전반적 교육분위기가 너무 경쟁적”이라며 “경쟁에서 밀려난 아이들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폭력과 괴롭힘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말했다. 손 선임상담원은 “가해 학생 가운데 부모나 교사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아이들이 끼리끼리 뭉치는 경향이 있다”며 “자기들끼리 뭉쳐서 폭력적인 성향을 노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52)는 집단주의 문화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왕따’든 집단 구타든 여러 명이 하다 보니까 책임감이 분산된다. 만약 잘못으로 인한 처벌이 오롯이 자신에게 떠넘겨진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잔인한 방식으로 폭력이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 교수는 “가해 학생들은 오히려 피해 학생이 문제가 있어 괴롭힘이나 폭행을 당하는 것이라고 정당화하면서 집단의 응집력을 강화하고 폭력행위를 멈춰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된다”고 했다.

문용린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65)는 “학교폭력은 과시성이 있어 가해자가 다른 아이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학대해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목격하는 아이들이 공포로 움직이지 못해서 학교폭력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의 김동균군(19)은 “학교폭력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 벌어지는 현상이다.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존중을 되돌려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군은 “학생들의 폭력 사태를 보고 ‘이러니까 때려서 가르쳐야지’ ‘청소년에게 인권은 아직 이르다’식의 접근이 이뤄질까봐 염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학교폭력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손재환 선임상담원은 “아이들이 자기 마음을 터놓을 만한 소통의 창구가 없다”며 “청소년 심리 상담 인력과 시설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공부 잘하는 아이, 집안 배경이 좋은 아이만 인정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틀로 아이들을 수용하고 인정해줄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금주 교수는 “다른 이들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정식 교과과정으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윤진 중앙대 청소년학과 교수도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 지혜를 키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보도] 학교폭력, 왜 중학교 2학년에 집중될까

2012. 01. 03

“2차 성장에 허세부리는 ‘중2병’ 탓…주2회 이상 자녀와 같이 식사하며 소통해야”

최근 ‘왕따(집단 따돌림)’나 학교 폭력으로 학생들이 잇달아 자살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학교 폭력이 제일 심각한 학년이 중학교 2학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달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세상을 등진 대구와 광주의 중학생도 2학년이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상담 결과를 종합해보면 남녀 모두 중2 즈음에 신진대사와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지면서 2차 성징이 일어나는 데다 ‘자신은 남과 다르고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춘기의 이른바 ‘중2 병’도 원인”이라며 “이 시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무조건 꾸짖기보다는 꾸준한 대화를 통해 자녀가 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충고했다.

3일 한국청소년상담원(이하 상담원)이 최근 펴낸 ‘2010년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친구 폭행 경험(주 1~2회 이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중학교 2학년이 1.3%로 제일 높았고 ▷중학교 1학년 1.2% ▷고등학교 2학년 1.1% ▷중학교 3학년 1.1% ▷고등학교 3학년 1.0% ▷초등학교 5학년 0.9% ▷초등학교 6학년 0.8% ▷고등학교 1학년 0.8%가 뒤를 이었으며, 응답한 전체 학생의 비율도 1.0%나 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0년 1년간 16개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전국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3학년 8만982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상담원은 조사 참가자를 지역별 인구 비율에 따라 총 인구수 523만8590명에 맞춰 산출했다.

응답자 비율을 학교급별로 살펴본 결과 ▷중학교 1.0% ▷인문계 고교 0.9% ▷전문계 고교 0.9% ▷초등학교 0.7%로 나타나 이같은 통계를 뒷받침했다. 시·도별로 보면 울산·강원이 1.2%로 제일 높았고, 대구·인천·전남이 0.7%로 가장 낮았다. 성별로 보면 남자 1.3%, 여자 0.9%였다.

이에 대해 해당 조사를 총괄한 상담원의 배주미 박사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담 사례로 미뤄볼 때 남자는 중2~중3, 여자는 중1~중2 즈음에 키가 크는 등 신체적 성장이 일어나면서 충동성과 공격성이 강해지며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짙어지면서 ‘질풍노도의 시기’가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1 때는 학교 적응에 바쁘고, 중3 때는 고교 진학 등 진로 준비에 신경써야 하는 데 반면 중2 때는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없는 것도 학교 폭력이 많은 이유로 추측된다”고 덧붙였다.

배 박사는 이같은 자녀의 변화에 당황해 체벌처럼 무조건 야단치는 것은 자녀 방황이나 부모 갈등 같은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 해결책’에 대해 “미국의 한 교육 종단연구에 따르면 스킨십이나 소통이 해결책이 된다고 했다”며 “맞벌이 부부가 많아 쉽지 않겠지만 주2회 이상 온 가족이 밥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대화하게도 자녀와 소통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Memo



학교폭력 문제진단을 위한 긴급토론회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으로 본
학교폭력의 자화상”

학교폭력 문제진단을 위한 긴급토론회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으로 본
학교폭력의 자화상”